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
Incheon, The World Best City

2007년도
계양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07. 5



監査官室

일련 번호	제 목	소 관	조치 구분	쪽
〈 인사조직분야 - 4건 〉				
1	다면평가 실시이후 교육수료자 등 명부조정으로 승 진후보자 순위 및 승진의결대상자 변경야기 등 인 사운영 부적정	자치행정과	주의	2
2	불문경고 처분자 서면경고 조치 미이행	”	주의	6
3	모범공무원 포상업무 추진 부적정	”	주의	8
4	감사담당 공무원의 자격 기준 등에 관한 사항	기획감사실	시정	10
〈 예산회계분야 - 14건 〉				
5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재무경영과	주의	13
6	하도급 계약관리 부적정	재무경영과외	주의	15
7	계양산성 제3차 발굴조사 용역추진에 관한 사항	재무경영과	주의	19
8	투·융자 심사 미이행	기획감사실외	주의	21
9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관련	문화공보과외	주의	24
10	선금급 지급 부적정	건설과	주의	27
11	단일공사 분할발주 부적정	교통행정과	주의	29
12	간담회 및 연찬회의 명목으로 일반운영비(급량비) 등 사용	교통행정과	주의	31
13	계약이행 불이행 시 책임확보 수단 미이행 등	도시정비과	시정	33
14	재난관리기금 관리·운용 부적정	재난관리과	주의	36
15	식품관리기금 여유자금 관리 소홀	환경위생과	주의	38

일련 번호	제 목	소 관	조치 구분	쪽
16	사회복지기금 관리·운용 부적정	복지서비스과	주의	40
17	구청장·부구청장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자치행정과	시정	42
18	시설공사 입찰 및 계약 부적정	재무경영과	시정	45
〈 국·공유재산관리분야 - 5건 〉				
19	국유지매각 부적정	재무경영과	주의	47
20	사용료 분납에 따른 보증금 예치소홀	"	주의	49
21	국·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갱신 및 사용료 부과 부적정	건설과	주의	51
22	일상경비 비품구입 부적정	자치행정과외	주의	52
23	미승인 정수물품 예산계상 등 물품관리 소홀	기획감사실외	시정	54
〈 세외수입분야 - 3건 〉				
24	도로점·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소홀	건설과	시정	57
25	도로점·사용료(차량출입시설)장기간 체납자관리소홀	"	주의	59
26	세외수입(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대납업무 소홀	교통행정과	개선	61
〈 지역경제·교통분야 - 5건 〉				
27	승강기 정기검사 위반업소 행정처분 소홀	재무경영과	시정	64
28	화물자동차 차고지 미확보 차량 행정처분 소홀	교통행정과	시정	66
29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 소홀	교통행정과	시정	67
30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신청인 결격여부 조회 미이행	지역경제과	주의	68
31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소홀	"	주의	69

일련 번호	제 목	소 관	조치 구분	쪽
〈 지방세분야 - 3건 〉				
32	주민세 특별징수분 과세소홀	세 무 과	시정	71
33	대도시내 법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세 소홀	”	시정	73
34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및 독촉 불이행	”	시정	75
〈 사회복지분야 - 4건 〉				
35	사회복지법인 재산관리 및 복지시설 지도감독 소홀	주민생활지원 과	주의	78
36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조치에 따른 행정절차 미이행	”	주의	80
37	사망자에 대한 노인교통수당 지급 부적정 및 환수조치 소홀	복지서비스과	시정	82
38	민원사무처리편람 제작 미이행	민원여권과	시정	90
〈 보건환경분야 - 10건 〉				
39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보건소	개선	93
40	방역장비 및 약품·소모품 등 구매 부적정	”	주의	97
41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	주의	100
42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부적정	환경위생과	주의	104
43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소홀	“	주의	107
44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관리소홀	“	개선	109
45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 부적정	“	주의	111
46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계약 부적정	청소행정과	개선	113
47	도로청소 잔재물 처리 위탁처리 부적정	“	시정	116
48	도로 진공청소차 소모품 등 구매 부적정	“	주의	120

일련 번호	제 목	소 관	조치 구분	쪽
〈 전산통신분야 - 4건 〉				
49	주민등록시스템 사용권한 부여 부적정 및 지도감독 소홀	자치행정과	주의	124
50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용역 관리·감독 소홀 및 유지보수비 지출 부적정	기획감사실	주의	126
51	바코드시스템 구축 및 자료관 유지보수 관련	민원여권과	주의	128
52	개인용 컴퓨터 보안관리 소홀	기획감사실	주의	130
〈 건설행정분야 - 2건 〉				
53	주기적신고 미이행업체 행정처분 소홀	건설과	주의	133
54	주기적 신고처리 부적정	건설과	주의	135
〈 문화공보분야 - 2건 〉				
55	유통관련업자 지도단속 소홀	문화관광과	주의	138
56	유통관련업자 교육관리 소홀	문화관광과	주의	140
〈 도시정비 - 3건 〉				
57	불법광고물 정비추진 소홀	건축과	주의	144
58	옥외고정광고물 허가처리 부적정	건축과	주의	146
59	도로공사 실시계획인가 부적정	도시정비과	주의	148
〈 토목·건설분야 - 12건 〉				
60	관내 맨홀보수공사 부적정	건설과	주의	151
61	맨홀인상 보수공사 보수비용 징수관리 소홀	건설과	시정	153

일련 번호	제 목	소 관	조치 구분	쪽
62	용역현황 관리 소홀	건설과	주의	154
63	재경비 정산 소홀	건설과	주의	155
64	지급자재 관리부실	교통행정과	주의	157
65	하수도 사용료 관리소홀	건설과	시정	158
66	하수처리구역 변경공고 미 실시	시(물관리과), 건설과	시정	160
67	도로개설공사 구간 내 손실보상물건(담장)처리 부적정	건설과	주의	162
68	건설폐기물처리 운반비 조정에 대한 설계변경 부적정	“	주의	163
69	견적1식 단가에 대한 설계변경 부적정	“	주의	165
70	보험료(국민건강, 연금보험)가입확인절차 소홀	“	시정	167
71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배치 관련 검토소홀	“	주의	169
〈 주택·건축분야 - 8건 〉				
72	위반건축물 관리소홀 및 이행강제금 미부과	건 축 과	시정	171
73	건축허가 처리 소홀	건 축 과	시정	173
7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민원서류 처리 소홀	건 축 과	시정	175
75	여성복지관 증축공사 설계용역 감독 소홀	재무경영과	주의	177
76	계양구청사 정밀점검 용역시행에 관한 사항	재무경영과	시정	179
77	공공건물 설계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계반영 소홀	재무경영과	주의	181
78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교통행정과	주의	183
79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보조업무 및 사후관리 소홀	교통행정과	주의	185

[illegible]

인사조직분야

[일련번호 : 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3

[제 목] 다면평가 실시이후 교육수료자 등 명부조정으로 승진후보자
순위 및 승진의결 대상자 변경 야기 등 인사운영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2005.3.21일자 승진인사 실시 경위

- 다면평가 계획 수립 : 2005. 3. 21(oooo 전결)

· 승진대상 : 38명

(행정6급 7명, 행정7급 8명, 행정8급 7명, 토목6급 1명, 토목7급 2명,
사회복지6급 1명, 사회복지8급 1명, 기계6급 1명, 건축6급 1명,
보건·간호6급 1명, 보건·간호7급 1명, 운전원9급 3명, 조무원9급
3명, 주차단속원 8급 1명)

- 다면평가 실시 : 2005. 3. 25 (ooo 전결)

· 승진대상 : 44명

(행정6급 7명, 행정7급 8명, 행정8급 12명, 토목6급 1명, 토목7급 1명
사회복지6급 1명, 사회복지8급 1명, 기계6급 1명, 건축6급 1명,
보건6급 1명, 간호6급 1명, 보건7급 1명, 간호7급 1명, 운전원9급 3명
조무원9급 3명, 주차단속원 8급 1명)

- 교육수료자 통보 : 2005. 3. 28

· 토론문화 발전과정(2005.3.21~3.25): 재무경영과 행정8급 ooo 외 2명

- 6급이하 승진직렬(복수직) 결정 : 2005. 3. 28 (ooo 전결)

①행정·사회 6급 1명 → 행정 ②행정·기계 6급 1명 → 기계

③토목·건축 6급 2명 → 토목1, 건축1 ④보건·간호·약무6급 1명 → 보건

- 승진인사(안) 결정 : 2005. 3. 28

· 승진대상자 : 40명(의결자와 동일)

- 승진후보자 명부조정 : 2005. 3. 28

· 선택전문 교육이수자 : 재무경영과 행정8급 000 외3

· 승진소요연수 도달자 : 지역경제과 농업6급 000 외2

- 인사위원회 승진자 의결 : 2005. 3. 29

· 의결자 : 40명

(행정6급 7명, 행정7급 8명, 행정8급 12명, 토목6급 1명, 토목7급 1명,
기계6급 1명, 건축6급 1명, 보건6급 1명, 보건7급 1명, 운전원9급 3명
조무원9급 3명, 주차단속원8급 1명)

- 지방공무원 임용(승진·전보) : 2005. 3. 3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5 규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인사위원회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심의 또는 승진의결 대상공무원의 직근 상위계급의 공무원, 동일계급의 공무원, 직근 하위계급의 공무원 또는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승진임용대상자 다면평가 실시계획(2005.3.21)』에 따르면 시 전출 및 결원, 휴직 등으로 승진 요인이 발생하여 승진임용 대상자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인사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전 직원이 공감하는 승진인사 원칙을 짚고자 다면평가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위 계획에 의한 다면평가위원회는 승진심사요인 발생시 한시적 비상설 기구로 구성 운영하고 각 부서별, 직렬별 안배를 거쳐 평가위원장은 구성위원 중 최상급자를 선임하고, 평가내용은 조직에 대한 기여도, 업무추진 능력 및 실적, 청렴성, 근무태도 등 8개 분야로 구성하여 평가하고 다면평가순위명부를 작성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와 비교(85:15) 산정 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인

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진심사 자료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는 2005. 3. 21 승진인사 요인이 발생, 행정7급에서 행정6급 승진대상자 7명 등 총 38명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2005. 3. 25 다면평가 위원을 선정, 다면평가를 실시한 후 승진후보자 명부에 15%의 비율을 반영하여 명부를 작성하였습니다.

2005. 3. 28 승진인사(안)을 마련하여 계양구인사위원회에 사전심의 의결을 요구하면서 행정8급에서 행정7급 승진대상자(승진대상 인원 8명)중 다면평가 전 승진후보자 명부상 지역경제과 행정8급○○○은 8위, 재무경영과 행정8급 △△△는 12위로 명부에 등재되었고, 다면평가 결과 순위를 살펴보면 위○○○은 다면평가 순위 8위, 위△△△는 14위로 명부점수와 다면평가 점수를 합산한 순위에도 위○○○이 8위, 위△△△가 13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되어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2005. 3. 28 교육수료자 통보(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기간 3. 21~3. 25)에 따라 위△△△의 교육점수 5점을 조정하여 명부에 등재함으로써 위△△△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이 8위, 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9위로 변경되어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2005. 3. 29 승진 의결 시 위△△△는 7급 승진대상자로 의결 2005. 3. 31 승진 임용되어 재무경영과에 재 보임되었으나(2003.9.20 현부서 임용) 위○○○은 정당한 승진 후보자 명부로는 승진임용대상자 1배수인 8위임에도 불구하고 다면평가 실시 후에 교육수료자 통보사항은 금번 인사에 반영치 않고 다음인사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위△△△의 교육점수를 인사위원회 개최 바로 전일에 반영하여 명부를 조정함으로써 정당한 본인 순위인 8위에서 9위로 변경되어 승진 의결시 불리하게 작용하여 의결에서 제외됨은(당시 인사위원회에서는 7급 승진자 8명 전원을 순위에 따라 의결) 물론 2003. 9.20부터 지역경제과에서 인사발령시 까지 근무경력 1년 6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출퇴근이 장거리인 효성1동으로 전보 발령한 반면 같은날 전입(2003. 9. 20)한 위△△△는 승진 후 동일부

서인 재무경영과에 재발령 하는 등 적정치 않게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다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면서 당초에는 행정8급 승진자 8명, 사회복지6급은 1명, 사회복지8급 1명, 토목7급 2명을 승진대상자로 다면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인사위원회 사전 의결시 행정8급 : 7명⇒12명, 토목7급:2명⇒1명, 사회복지 6급: 1명⇒0명, 사회복지 8급 : 1명⇒0명으로 아무런 사유 없이 임의로 조정하여 사전 의결하여 승진 인사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면평가를 실시할 경우에 복수직렬의 경우 적정 직렬을 정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보건·간호 6급 1명과 7급 1명에 대하여 복수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사전심의 및 의결 시에는 아무런 검토 없이 보건직으로 심의 의결하여 승진 임용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에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행정 절차를 엄정히 이행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불문경고 처분자 서면경고 조치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 불문(경고) 처분자 현황

의 결 일	소 속	직 급	성 명	혐 의 내 용	요구자의견	처분결과
2004.4.27	건설과	토목6급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및 지목처리 부적정	경징계	불문경고
2004.5.28	건설과	토목6급	○○○	음주운전	경징계	불문경고
2005.4.25	도시정비과	임업7급	○○○	2005식목행사 임목벌채 부적정	경징계	불문경고
2005.6.13	지적과	지적6급	○○○	체비지 매각부적정	경징계	불문경고
2006.1.20	지적과	지적6급	○○○	지적업무 처리 부적정	경징계	불문경고
2006.1.23	총무과	행정5급	○○○	성실의 의무위반	경징계	불문경고
2006.8.14	보건행정과	행정6급	○○○	품위유지의무 위반	경징계	불문경고
2006.8.14	복지서비스과	행정7급	○○○	품위유지의무 위반	경징계	불문경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칙 제10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규칙 시행지침 제8조에 의하면 징계처분권자가 인사위원회로부터 경고할 것을 권고 받았을 때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 소속 기관장 명의로 당해 공무원을 서면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는 2004. 4. 27 계양구 인사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지목처리 부적정 혐의로 경징계 요구되어 불문(경고)로 의결된 건설과○○○ 등 8명에 대하여 소속기관장 명의로 당해 공무원을 “서면경고”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조치하지 않는 등 업무추진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불문경고자 서면경고 조치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모범공무원 포상업무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모범공무원 포상현황

구분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비 고
계	77	21	13	13	15	15	
구본청	54	16	7	7	14	10	16개부서
동,보건소	15	4	4	4	1	2	12개기관
의회	8	1	2	2	0	3	1개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는 구정의 각 분야에서 투명한 사명감과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하는 모범공무원을 발굴하여 매 분기 4명씩 선정하여 포상과 월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12개월 지급하고 1인당 3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산업시찰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직원사기 앙양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양구 ○○○과에서는 모범공무원을 발굴하여 포상을 함에 있어 현업 및 격무부서 직원 등의 사기를 고려하여 부서(기관)별 포상자 등을 객관성 있게 선정하여야 함에도 지원부서인 ○○○국 8명, ○○○실 5명, ○○○과 5명 등 지원부서 및 구 본청 공무원들에게 수상자가 편중되었으며, 동사무소인 ○○○1동 및

○○○동, ○○○4동은 최근 5년 동안 단 1명도 포함되지 않게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모범 공무원 선발에 따른 표창기준을 마련하여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구
정 각 분야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뚜렷한 기준 없이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만으로 운영하는 등 모
범공무원 표창대상자 선발업무를 적정치 않게 추진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에는 구청장 정기 모범공무원 표창 등 포상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구정
의 각 분야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이 선발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
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실(○○○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감사담당 공무원의 자격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 감사담당 공무원의 자격 기준 등 운영 현황

구 분	자격기준	특 전	복무수칙	비 고
운용여부	미 존치	미 이행	미 작성	

인천광역시 자체감사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감사담당 공무원을 선발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자 중 아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우선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상훈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된 자 또는 모범공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2. 정부 표창규정 또는 인천광역시 표창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3.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4. 기타 시장 및 감사기구 설치기관장이 감사담당 공무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우선 선발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서 “청렴도”가 불량한 자, 기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부적 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감사담당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 평정에 있어 우대하여야 하고,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임명권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임명된 자는 감사담당공무원복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명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감사담당공무원복무수칙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는 감사담당 공무원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실적 우수자 및 청렴도 등에서 월등한 공무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마련치 않고 있는가 하면,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는 평정에서 우대하는 방안과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함에도 이행치 않고 있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감사담당 공무원 복수수칙을 별도로 정하여야 함에도 마련치 않고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체감사규칙 등 관련 규정 등에 감사담당공무원 자격기준 및 복무수칙 등을 마련하여 업무실적 우수자 및 청렴도 등에서 월등한 공무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회계분야

[일련번호 : 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과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에 붙일 수 있으며, 동시행령 제21조 1항 6호 및 동시행규칙 제24조, 25조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동시행령 제21조 1항 5호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과에서는 2006.12.22일 설계금액 41,794천 원의 「개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에 대하여 입찰공고하면서 제한한 입찰참가자격을 보면 “...EMC 스토리지 전문가자격증(EPPP)보유직원이 3인 이상, HP 국제공인자격증(HPCP-CSA)보유직원이 3인 이상, 오라클 OCP자격증 보유직원이 2인 이상 보유...” 등으로 위 관련법에 의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동종의 용역수행실적”으로 볼 수 없는 과도한 자격제한이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2개소의 업체만이 각각 99.0%, 99.7%의 투찰율로 응찰하여 (주)○○○시스템이 40,920천 원 (99.0%)에 낙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낙찰하한선인 87.745%와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등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위건 「개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의 입찰참여 가능지역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로 제한하여, 그 결과 서울 소재 업체가 낙찰되는 등 지역소재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의 취지에 위배하여 입찰을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을 도입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관련 규정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특혜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과외 1개과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 계

[제 목] 하도급 계약 관리 부적정

[현 황]

《 구)청사부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하도급관련 진행사항 》

- 2005.9.21 하도급계약 통지 (○○건설(주)→계양구)
: △△건설(주)와 토공부분 하도급계약
(하도급계약일 2005.8.26, 하도급계약 통지서 2005.9.21)
- 2005.10.11 하도급계약 불승인 통보 (계양구→○○건설(주))
: 주된공사의 전부 하도급
- 2005.11.11 하도급 불승인 통보에 대한 회신 (○○건설(주)→계양구)
: 하도급계약의 적법성 주장, 재검토 요청
- 2005.12.1 하도급 불승인 통보에 대한 재검토 회신 (계양구→○○건설(주))
: 하도급 계약 불승인 재확인, 2005.12.10한 해지요
- 2005.12.9 하도급계약 해지 통보요청에 대한 회신 (○○건설(주)→계양구)
: 건교부 질의회신과정에 있어 2005.12.10까지 하도급계약 해지 불가
- 2006.1.5 하도급계약 통지 접수 (○○건설(주)→계양구)
: 하도급계약 파기 및 계약 내용 수정 재계약
(하도급계약일 2005.11.30, 하도급계약 통지서 2006.1.4)
- 2006.1.9 하도급 계약 적정통보 (계양구→○○건설(주))
- 2006.6.16 준공금 지급

[위법부당내용]

《 하도급계약 통보 기한 경과 및 그에 따른 조치 미시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5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9조에 의거 이를 어길시에는 2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고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 제5조 1항에 의하면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 통보를 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한 서류(계약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지급보증서 사본)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사부지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설(주)에서는 토공부분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2005.9.21 하도급계약 통지서를 접수하였으나 “주된공사의 전부 하도급”을 사유로 보완 과정을 거쳐 △△건설(주)와 2005.11.30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2006.1.4 하도급계약 통지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는 위 하도급계약이 30일이 경과하여 통보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과에서는 당 하도급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고 △△△과에서는 2006.1.9 이를 근거로 ○○건설(주)에 적정하다고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5.12.9 ○○건설(주)에서 계양구에 회신한 “하도급계약 해지 통보 요청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당시 당건 관련사항에 대하여 건교부 질의회신과정에 있어 2005.12.10까지 하도급계약 해지가 불가하다고 표현하고 있어 최소한 2005.12.9 현재는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함에도 2006.1.4자 하도급계약 통보서에 하도급 계약일을 2005.11.30일로 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사항 없이 이를 묵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미시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29조에 의거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하도급 직접 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도록 되어 있음에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에서는 「○○동 273-2번지 일원 도로(교량) 개설 공사」를 시행하면서 2005.1.6 원도급사인 “○○건설(주)”에서 하도업체인 “△△토건(주)”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동의서를 갖추어 발주처에 계약사항을 신고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따라서 대금 지급시에는 하도업체의 직접지급 신청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직접 지급하여 주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전액 원도급자의 지급 신청을 받아 원도급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 하도업체 기성금 지급 여부 미확인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제1항에 의거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기 수령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기성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발주부서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원도급자에게 지급된 기성금이 하수급인에게 정확히 배분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는 2005.12.30일 “○○동~○○동간 자전거도로 및 도로개설공사”(계약금 2,937,371천 원)에 대한 기성금 345,955천 원을 지급하면서 '05.1.10 지급한 전회 기성금 663,319천 원에 대한 하수급인 배분여부를 증빙하는 서류를 함께 징구하여 이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앞으로, 하도급 계약사항 접수 시에는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사항

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2. 하도급 공사 관련 대금 지급 시에는 자금이 하도급 업체에 우선적으로 지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하도급 업체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와 같이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중 책임소재가 있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훈계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산성 제3차 발굴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위법부당내용]

《 권한 없는 자와의 계약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에서는 2006.5.16 「○○산성 제3차 발굴조사 용역」을 시행하면서 계약금 235,000천 원에 ○○대학교 고고연구소와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계약체결 과정에서 ○○○과에서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에 대한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종 자격증이나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고 계약에 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그 결과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등명서 등 대부분의 증빙서류가 ○○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되어 있었으며 확인결과 ○○대학교 고고연구소는 독립된 기관이 아니고 ○○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의 일개 부속기관에 불과하여 적절한 자격을 갖춘 계약 상대방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 계약을 이행하면서 업무협약, 설계변경, 대금청구 등 각종 행정처리 과정에서 산학협력단 명의로와 고고학 연구소의 명의로 혼재하여 나타나는 등 계약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책임한계가 모호하게 나타나는 등 적절한 회계처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습니다.

《 수의시담 부적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2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불일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 비치하여 가격협상에 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의 경우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 3천만 원 이하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만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에서는 위건 「○○산성 제3차 발굴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을 시행하면서 경리관이 결정한 예정가격을 작성 비치하고 적절한 응찰과정에 의한 수의시담을 실시하여 낙찰가격을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시담, 가격입찰서 제시에 따른 낙찰가 결정 등 가격협상에 따른 모든 절차를 생략한 채 단순히 예정가격 만을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임의로 235,000천 원의 계약금액을 결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 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앞으로는 계약업무 처리시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한 계약상대방과 적법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2. 예정가격 작성에 따른 수의시담 등 계약의 절차를 숙지하여 적절한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실외 3개과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투·융자 심사 미 시행

[현 황]

< ○○중학교 앞(소1-3) 도로개설 >

예산액 (최종)	2004 최종예산		2005 본예산		2006 3회추경		투융자 심사일
	일시	금액	일시	금액	일시	금액	
1,654,000	04-6-29	362,000	04-12-21	592,000	06-12-20	700,000	미실시

< ○○체육공원 조성공사 >

예산액 (최종)	당초(2005.1추)		2005.2추경		투융자 심사일
	일시	금액	일시	금액	
1,795,000	05-7-4	1,060,000	05-12-19	735,000	01.9.25

< ○○체육공원 조성 >

예산액 (최종)	당초(2005.2추)		2006.본예산		2006.3추경		투융자 심사일
	일시	금액	일시	금액	일시	금액	
1,080,000	05-12-19	700,000	05-12-23	800,000	06-12-20	-420,000	01.9.25

[위법부당내용]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 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

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시·군 및 자치구의 사업 중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제323호) 제6조에 따르면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에 의거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에서는 “○○중학교 앞 (소1-3) 도로개설”을 위하여 2004년도에 362,000천 원, 2005년도에 592,000천 원, 2006년도에 700,000천 원을 각각 예산에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06년도에 계상되는 예산은 700,000천 원이지만 그동안 계상된 예산 누계금액이 총 1,654,000천 원으로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이 되어 2006년도 예산편성 이전에 투·융자심사에 부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에서는 “○○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2001년 9월 투·융자심사를 거쳐 2005년도에 1,795,000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2005년과 2006년에 걸쳐서 이의 집행을 대부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에 따라 2001년도에 투·융자심사를 거친 위건 사업에 대하여는 3년이 경과한 2005년도에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재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 건의 경우와 동일하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에서도 “○○체육공원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2001년 9월 투·융자심사를 거쳐 2005년에 700,000천 원, 2006년에 800,000천 원을 계상하고 일부 감액하는 등 총 1,080,000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투·융자 재심사를 누락한 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실에서는 위 3건의 투·융자심사 누락 사업에 대하여 투·융자 심사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적극적으로 이를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 재정 투·융자사업 관련 예산 편성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적절한 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외 1개과

[행정상 조치] 주의(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인천광역시계양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하여 구의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법령·조례의 지원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 수행이 곤란할 경우 사업비에 한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개별법령에 의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법부당내용]

《과다한 운영비 지원 등》

- ○○○인천광역시계양구지회 보조금 지급 현황

(금액 : 천원)

연도별	계	계양구 지회			동보조금	독서회 보조금	집행잔액
		소 계	사업비	사업관리비			
계	133,200	78,000	10,745	67,255	52,200	2,400	600
2005년	65,500	37,900	5,638	32,262	26,400	1,200	0
2006년	67,700	40,100	5,107	34,993	25,800	1,200	600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업비에 한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야 하며 개별 법령에 의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5년 및 2006년도의 ○○○ 계양구 지회에 지원한 사회단체보조금 총액 78,000천 원 중 87%인 67,255천 원이 사업관리비로 이는 지급된 보조금 중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실제 사업비 외 경비로 사용》

- 계양구 ○○회 보조금 정산 현황

(금액 : 천원)

연 도 별	보조금액	보조금 사용내역		비 고
		사 업 비	격 려 금	
계	30,800	4,900	25,900	
2005년도	15,400	4,900	10,500	
2006년도	15,400	0	15,400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에서는 해마다 계양구 ○○회로부터 생활체육 활성화(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 전문체육인 육성(전국대회 출전 지원 및 체육우수선수 · 학교 지원) 등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 받아 2005년 · 2006년에 각각 15,400천 원 씩 총 30,800천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 그러나 계양구 ○○회에서는 상기내용의 주요사업 추진 경비로 사용치

아니하고 2005년~2006년 계양구로부터 지원된 보조금 30,800천 원중 84%인 25,900천 원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하여야 할 격려금으로 집행되고 있는 등 상기 주요사업 목적 외로 예산집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 하였으며 또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보조금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규모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양구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비(공무원 3명, 전문가 2명, 구의회 의원 4명)에서 보듯이 민간전문가와 비교하여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현실적으로 목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공공부문과 공생관계에 있는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심의위원 구성에서 차지하는 민간전문가 참여가 적은 것은 신청단체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심의하는 기능이 저하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처 분 요 구]

1.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부실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도·감독에 대한 자체방안을 시행하기 바람
2. ○○○과에서는 향후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정산함에 있어 사업목적 외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선금급 지급 부적정

《 선금급 지급현황 》

(금액:천원)

공 사 명	계약금액	공사기간	선 금 급 지 급 내 용				비 고
			신청액	지급액	지급일	비 율	
○○○○지구 하수 관거 정비공사 (부분보수)	328,988	'06.11.09 ~'07.05.08	164,494	164,494	'06.11.29	50%	

※ 발주부서 : 계양구 ○○○과

※ 예 산 명 :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2조(적용범위) 제8항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양구 ○○○과에서 발주한 「○○·○○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경우 2006.11월 계약하여 2007년 5월 준공예정이므로 당연히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이었으며, 또한 공사 착공일이 11월로써 동절기를 앞둔 상황에서 선금의 필요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선금이 필요하더라도 상기 규정처럼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계양구 ○○○과에서는 「○○·○○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328,988천 원의 50%인 164,494천 원을 선금급으로 신청('06.11.15)하자. 상기 규정에 의한 연도내의 집행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신청금액 전액(164,494천 원)을 과다 하게 지급(2006.11.29) 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계약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 등으로 향후 동일사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2

[제 목] 단일공사 분할 발주 부적정

《 공사발주현황 》

(금액 : 천원)

사 업 명		계약 방법	설 계 금 액	도금액	%	계 약 일	도 급 자
소 계			57,321	52,768 (50,296)	92.1 (87.745)		
	주정차금지선 안내판설치공사	수의	11,748	11,045	94.0	'05.02.27	○○공사
	주정차금지표시판 설치공사	수의	25,586	23,045	90.1	'05.08.01	(주)○○건설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공사	수의	19,987	18,678	93.4	'05.09.16	○○기업
소 계			40,403	37,895 (35,451)	93.7 (87.745)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공사	수의	21,857	20,922	95.7	'05.05.12	(주)○○건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공사(2차)	수의	18,546	16,973	91.2	'05.11.28	(주)○○건설

[위법부당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동법 시행령 제68조 및 동일구조물공사및단일공사집행요령(획계예규 2200. 04-126-2, 2003.12.26)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동일구조물 및 단일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견적입찰제확대시행계획 [○○○ 회계45110-878(2003.04.15)] 및 공사·용역 수의계약 제도개선[계양구 ○○ 41341-4880(2002.12.300)]에 의하면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다수업체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견적입찰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양구 ○○○과에서는 예산상 사업명칭은 상이하게 표시되어 있다고는 하나, 같은 시설비 목내에 편성되어 있고 동일부서에서 추진하며 사업성격상 단일공사일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시기를 특별히 다르게 적용하여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 “현황”의 주정차금지선 안내판설치공사·주정차금지표시판 설치공사·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공사 등의 3개 공사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공사·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공사(2차) 등의 2개 공사는 성질상 단일공사이므로 일괄 설계하여 발주함이 공사관리·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계양구 ○○○과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각각 별도로 발주함으로써 전자견적 입찰시 낙찰 하한선이 예정가격의 87.745인 점을 감안할 때 위 “현황”과 같이 분할발주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계금액 대비 안내판설치공사의 경우 4,553천 원 상당, 주차구획선 정비공사의 경우 2,444천 원 상당의 예산낭비가 예상되며 또한, 다수업체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게 하는 등 공사발주 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계약담당 공무원으로서 투명한 업무처리를 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한 점 문책(훈계)하기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제 목] 간담회·연찬회의 명목으로 일반운영비(급량비) 등 사용

《 일반운영비(급량비) 등 집행 현황 》

(금액 : 천원)

연번	사 업 명	집 행 일	과목해소	집행액	비고
	15건			3,686	
1	단속요원 업무연찬회	'05.02.28	급량비	310	
2	민간용역 직무교육 연찬회	'05.03.29	급량비	298	
3	교육에 따른 피교육자 중식	'05.04.18	급량비	200	
4	단속직원 사기진작 간담회	'05.06.10	급량비	72	
5	단속관련자 사기진작 간담회	'05.06.20	급량비	405	
6	단속원 정년퇴직 연찬회	'05.06.27	급량비	200	
7	명예계도요원 간담회	'05.07.08	급량비	390	
8	서포터즈 사기진작 간담회	'05.09.13	급량비	231	
9	설맞이 단속직원 연찬회	'06.02.01	급량비	359	
10	교통상황실 단속요원 간담회	'06.04.14	급량비	100	
11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간담회	'06.06.07	급량비	120	
12	비전임계약직 및 서포터즈 간담회	'06.11.24	급량비	399	
13	주차장건설사업 관련 간담회	'06.11.24	급량비	166	
14	2006 업무보고 관련 간담회	'06.11.24	급량비	88	
15	공익요원 사기진작 간담회	'06.12.08	공익요원보상 금	348	

※ 집행부서 : 계양구 ○○○과

[위법부당내용]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에 의하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서 일반운영비(급량비)는 정규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 및 휴일특별근무자 등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며 또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병역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되는 중식비, 교통비, 기타 경비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양구 ○○○과에서는 주차관리특별회계를 운용함에 있어 관련법 개정에 따른 연찬회·교육·간담회 및 단속요원 등의 사기진작 차원의 식사대금 명목으로 일반운영비(급량비)에서 14건에 3,338천 원을 그리고 공익요원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 식비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급량비)에서 1건 348천 원 등 총 15건 3,686천 원을 목적외로 사용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회계담당공무원으로서의 선량한 업무추진을 하지 못한 점 문책(훈계)하기바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계약의무 불이행 시 책임 확보 수단 미 이행 등

《 계약의무 책임확보 수단 이행 현황 》

(금액 : 천원)

공 사 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계약보증증권		공사중지	보증기간 연장	
			금액	기간		기 간	이행일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77,498	‘06.07.05 ~ ‘06.08.09	15,499	‘06.06.30 ~ ‘06.10.09	‘06.07.26	미 이 행	미 이 행
○○지구 중로 2-36호선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25,989	‘05.01.28 ~ ‘05.02.26	5,197	‘05.01.24 ~ ‘05.04.27	미 시 행	‘05.01.24 ~ ‘07.03.04	‘06.12.04

[위법부당내용]

《 계약보증기간 미 확보 및 지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케 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61조에 의하면 계약보증금의 보증기간은 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기간의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의무 이행을 책임 지을 수 있도록 계약보증금의 보증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양구 ○○○과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교통신호기 설치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77,498천 원으로 당초 공사기간('05.07.05~'06.08.09)을 교통영향평가 용역 완료 시점을 예측하여 공사재개 시기를 정하여 공사중지를 통지 하였어야 함에도 공사 재개일을 추후 통보 로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중지 통보를 하였으며, 또한 계약이행 보증기간 역시 연장하여야 했으나 계약보증기간 만료일인 '06.10.08일 이후 감사일 현재 까지 약 4개월 동안 당해 공사에 대한 계약보증기간 책임 확보 수단을 미 이행하였으며

○○지구 중로 2-36호선 교통신호기 설치 공사의 경우는 계약금액 25,989천 원으로 공사기간('05.01.28~'05.02.26)이후 인천지방경찰청○○○과 7821('06.3.2) 호로 “주변 토목시공이 신호기공사를 할 만큼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공사재개가 어려우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공사재개는 추후 토목공사 진행에 따라 통보예정”이라는 공문을 접수 한 바

계양구 ○○○과에서는 당초 공사계약기간 이내 및 인천지방경찰청 관련공문(교통신호기 공사중지에 따른 검토사항 통보) 등 이에 따른 충분한 검토를 이행치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당해 공사의 발주처로서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중지 통보를 이행치 아니하였으며, 당 공사의 공사이행을 위한 계약보증기간 연장을 보증기간 만료일('05.04.27)이후 약 18개월 이후인 '06.12.4일에서야 계약이행을 위한 책임 확보를 이행하였습니다.

《 보증보험증권 관리 소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내지 제55조 및 인천광역시계양구2재무회계규칙 제84조에 의하면 보증보험증권 등을 납부할 때에는 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제출하게 하여, 보증금납부서는 지출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하고 보증보험증권 등은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수불부에 의거 정리하고 금고 및 구 공금지급 대행점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양구 ○○○과에서는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운용함에 있어 각종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에 대한 계약보증서를 납부 받았으나,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유가증권 수불부에 의거 정리하여 금고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관련 지출증빙서류에 그대로 함께 편철하여 관리 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 동일사례 발생치 않도록 업무연찬 하시기 바라며, 미 확보된 계약 미 이행시 책임확보를 위한 제반사항을 조속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및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재난관리기금 관리·운용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계양구 ○○○과에서는 2005,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2005년도 지출계획은 하수역류차단장치 설치비로 20,000천 원을 계상하였으나,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로 한다)를 총 3회 개최하여 당초 지출계획을 변경, 심의 의결하여 총 132,60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당초 사업비에 지출계획이 전혀 없었으나 전년도와 같이 총 3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 변경 심의하여 총 51,04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는 주요항목 기준 5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지방의회 심의·의결이 요구되나 재난관리기금의 경우에는 지방

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유로 기금운영계획수립시 사전에 충분히 예견되어지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에 대한 예산액 및 사업내용 등을 기금운용계획안에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을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원 모두가 해당 구청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심의를 하는 등 재난관리기금 관리·운용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재난관련 예방사업의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에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기금 여유자금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2006년도 기금운용 및 성과분석 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201호, 2005.12.30)에 의하면 장기성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자치단체 금고에 정기예금, CD 등 저축성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계양구재무회계규칙 제74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유희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양구 ○○○과에서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관리함에 있어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에 대하여는 만기시점에서 금고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재예치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2005년도, 2006년도 정기예금 재예치 내역을 검토한 결과 총 17건 중 14건이 만기가 도래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일 내지 28일이 지난 후에 재예치 함으로써 기금적립으로 인한 이자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붙임 : 2005~2006년도 ○○기금 정기예금 재예치 현황 1부.

[처 분 요 구]

만기 도래하는 예금의 이자를 관리함에 있어 만기시점의 이율의 고려하여 재예치하는 등 이자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정기예금 재예치현황(2005년~2006년)

(단위 : 원)

연번	예치금액	이율	개설일	만기일	재예치일	지연일
1	13,000,000	3.70%	03.12.08	05.06.08	05.06.22	14
2	36,000,000	3.70%	04.02.03	05.08.03	05.08.31	28
3	17,000,000	3.80%	04.03.03	05.08.03	05.08.31	28
4	39,500,000	3.80%	04.04.08	05.06.08	05.06.22	14
5	20,900,000	3.80%	04.06.10	05.06.10	05.06.22	12
6	26,400,000	3.80%	04.07.23	06.01.23	06.02.01	9
7	76,000,000	3.30%	04.09.03	06.03.03	06.03.13	10
8	25,000,000	3.30%	04.09.21	06.03.21	06.03.24	3
9	13,000,000	2.95%	05.06.22	06.06.22	06.07.04	12
10	39,500,000	2.95%	05.06.22	06.06.22	06.07.04	12
11	20,900,000	2.95%	05.06.22	06.06.22	06.07.04	12
12	21,000,000	2.95%	05.06.23	06.06.22	06.07.04	12
13	36,000,000	3.20%	05.08.31	06.08.31	06.09.01	1
14	17,000,000	3.20%	05.08.31	06.08.31	06.09.01	1
15	13,000,000	3.75%	05.11.28	06.11.28	06.11.29	1
16	50,000,000	3.75%	06.01.13	07.01.13	07.01.23	10
17	39,461,980	3.75%	06.02.01	07.02.01	07.02.06	5

[일련번호 : 16]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및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기금 관리·운용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계양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9조에 의하면 동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무는 인천광역시계양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양구 ○○○과에서는 기금을 집행함에 있어 지출결의서의 작성은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임에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금고에 지급명령을 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 및 인천광역시계양구재무회계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으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일반 협조공문으로 구금고에 지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계양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기금운용·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는 우리동네 독거노인 지킴이사업 추진계획(○○○과-11644, 2006.5.10)을 수립하여 요구르트 구입비용 6,000천 원을 노인복지기금 활용 및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함에 있어 기금운용계획서 변경이 이루어진 후 사업을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2006.6.12.부터 사업을 우선 진행하고, 추후 2006.11.3. ○○기금운용·관리위원회 심의를 의결하여 2006.11.27. 자금을 교부하는 등 ○○기금 관리·운영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회계관련 사무는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하여 기금을 집행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기금이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7]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600천 원

[신분상 조치]

[제 목]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위법부당내용]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구 분	○ ○ ○			○ ○ ○		
	계	기관운영	시책추진	계	기관운영	시책추진
2005년도	69,042	44,479	24,563	49,337	31,779	17,558
2006년도	29,888	26,130	3,758	29,534	20,061	9,473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시책추진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이나, 주민의 세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公款임을 감안 무엇보다도 공적이며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당하게 집행하였습니다.

1. 업무추진비의 사적집행

업무추진비로 공적인 경조사비를 집행하는 것은 경비의 대상이 보다 포괄적이기 때문에 소속기관 직원의 경조사비로 지출하거나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유관기관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기관의 구성원이나, 단체임원, 또는 전직 공무원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은 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에도, 계양구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유관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자에게 사적인 경조사비로 총 14건 600천 원('05년도 : 8건, 380천 원, '06년도 : 6건 220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 업무추진비 집행과목 적용 부적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시책추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 사업에 활용되어야 하며, 시책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즉, 축·조의금, 사적인 용도사용, 개인축하선물비, 보도사례비, 특히 내부직원을 대상으로는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계양구에서 집행한 시책업무추진비 중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격려금이나, 간담회 등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아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양구에서는 ○○○ 시책업무추진비 중 내부직원 간담 목적으로 2006년도 6건 1,737천 원, 2005년도 26건 5,074천 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차량유류비, 행정장비구입, 플래카드제작, 초청장 유인 등은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등을 통해 구입 또는 제작하고, 구에서 추진하는 기념행사 등은 별도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하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직원송년 한마음잔치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집행되어야 하나, ○○○ 업무추진비로 2005년도 직원생일 케익 구입 13회 2,172천 원, 3.1절 참배관련 소요비용으로 총 2,613천 원(물품구입 6건 2,333천 원 오찬 및 격려 3건 280천 원)을 집행하고 2006년도에는 직원송년 한마음축제 용도로 총 4건 4,145천 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으며, ○○○ 2006년도 시책업무추진비로 구청장 취임식 관련 초청장 및 현수막 제작비로

667천 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1.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양구에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적정하게 지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업무추진비의 사적집행분 총14건 600천 원에 대하여는 회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8]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488천 원

[신분상 조치]

[제 목] 시설공사 입찰 및 계약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현 황 》

공사명 : ○○중학교(소1-3호선)앞 도로개설공사

계양구 관내 도로시설 확충을 위해 시행된 『○○중학교(소1-3호선)앞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과에서는 동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06.12.01 △△△과로 공사계약 의뢰 하였으나, ○○○과에서 당초 내역에 포함되어 있던 시험비 4,107천 원(코아두께, 수밀시험, CCTV조사)상당에 대하여 입찰시 공급가액에 포함 시키지 않고 임의로 입찰후 추가 금액으로 제외 시킴은 물론 입찰자 선정 후 동 금액에 대하여 추가시는 낙찰율을 고려한 금액으로 계약 하여야 함에도 당초 설계금액으로 반영하여 488천 원 상당을 과다하게 계약체결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1. 과다하게 계약된 488천 원 상당에 대하여는 관련자와 협의하여 감액 조치 하고
2.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에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 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관리분야

[일련번호 : 19]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국유지 매각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국유지 매각 현황 》

소재지	매수자	지목	면적	매각일자	매각금액	매각방법	비 고
○○동 319-7	ooo	대지	50m ²	2005.12.8	73,750천원	수익계약	

2005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관리·처분 기준>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일단의 토지면적이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 있어서는 300m²이하, 기타의 시 지역에 있어서는 500m²이하, 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1,000m²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 이 경우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의 방법으로 매각하여야 합니다.

계양구 ○○○과에서는○○동 319-7번지 국유지에 대한 매수 신청서를 2005.9.1. △△△(○○동 319-1번지)으로부터 접수하여 2005년 국유재산관리계획(○○○과-7223)을 2005.9.12. 시 ○○○과로 제출하여 2005.10.10. 국유재산매각에 따른 매각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005.10.14. 매각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2005.11.1. 매수신청자인 △△△에게 국유재산 매각(○○○과-8595)을 통보하여 2005.12.8. △△△과 국유잡종(토지)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각대상 토지인 ○○동 319-7번지는 ○○동 319-1번지(소유자 △△△외 2)와 ○○동 319-8, 319-12번지(소유자 □□□)와 인접한 토지로 매각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의 방법으로 매각하여야 함에도 대상토지 고저가 도로접면(대로)보다 저지대에 위치하며 인접지(○○동 319-1번지)가 매수신청인 소유이며 현 상태는 맹지이므로 매수신청자에게 수의계약 매각함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과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각대상 토지의 인접 토지는 위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3개의 필지와 인접하여 향후 민원 발생 등을 감안하여 인접 토지주에 대한 지명경쟁 등의 방법으로 매각 방법을 강구 하여야 했으며, 또한 319-1번지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신청인 △△△외 2의 공유지로 공유지분권자의 공동명의로 매수 신청하는 것이 아닌 경우 각각 상대방의 지분 매수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고 매수신청인과 수의계약을 하였어야 했음에도 매수 신청인 △△△에게 수의매각을 2005.11.1. 결정한 후 그 이후인 2005.12.7. 공동지분권자인 ○○○로부터 토지매입 포기각서를 받는 등 국유재산 매각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기준을 철저히 숙지하시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사용료 분납에 따른 보증금 예치 소홀

[위법부당내용]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사용료가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수익을 허가(허가기간은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양구 ○○○과에서는 ○○동 885-15번지의 6개의 필지에 대하여는 연간사용료가 1,000만 원 이상이므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부자로 하여금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붙임 : 국유재산 사용료 분납현황 (1,000만 원 이상) : 따로 붙임

[처 분 요 구]

연간 사용료 1,000만 원 이상을 분납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분납현황 (1,000만원 이상)

소재지	지번	허가면적	대부목적	사용자	대부료 (원)
	885-15	376.0	상업용		11,821,130
	480-7	352.0	상업용		13,874,420
	60	305.0	상업용		15,351,760
	885-3	696.0	상업용		26,332,250
	85	1,542.0	야적		13,144,850
	408-5	1,312.4	상업용		38,650,180
	665-6	856.0	공업용		21,742,400

[일련번호 : 2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갱신 및 사용료 부과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국유재산법 제2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 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허가기간이 종료된 재산에 대하여 수의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허가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반드시 그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갱신허가를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14조에 의하면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한 사용·수익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계양구 ○○○과에서는 소관 국·공유재산 2005년도 182건, 115,214천 원, 2006년도 152건, 126,410천 원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함에 있어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갱신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3여개월이 지난 후에 사용·수익허가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역시 선납하여야 함에도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부과하는 등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갱신 및 사용료 부과에 부적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허가기간을 갱신하거나 사용료 부과를 부과함에 있어 관계규정에 부합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5개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일상경비(일반운영비) 비품 구입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일상경비(일반운영비) 비품 구입 현황 》

(단위:천원)

부 서 명	물품명	수량	금 액	구입일	비 고
계		29	2,244		
○○○과 (○○○과)	순찰시계	1	187	05. 5. 3	
	파티션	4	330	05.12. 5	
	캐비닛	1	90	06. 1.16	
○○○과	의자	2	176	06.10. 4 06.11.15	
○○○과	서류가방	12	211	05.12.20	
○○○과	중고 냉장고	1	66	05. 7.27	
	소형냉장고	1	66	06. 2. 6	
	가습기	1	63	06. 2. 6	
○○○과	의자	1	297	05. 8.11	
	디지털카메라	2	386	05. 9.21 05.12.28	
	목재옷장	1	132	06.12.19	
○○○과	캐비닛	2	240	06.11.30	

「인천광역시계양구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서당경비에 의
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례 [별표1]에 소
모품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의류, 수선용 재료 등)
-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 ④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 원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일상경비(일반운영비)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에 한하여 구입하여야 하고, 비품(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려면 자산취득비 예산을 책정하여 구입하여야 하는데, ○○○과 등 6개 부서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비품 29대 2,244천 원을 일상경비(일반운영비)에서 부당하게 구입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에는 소모품이 아닌 물품(비품)을 구입하고자 하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취득비 예산을 책정하여 구입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실외 1개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미승인 정수물품 예산계상 등 물품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 현 황 》

해당부서	물품명	수량	금 액	정수승인일	예산계상일	구 입 일	비고
계		4	9,845				
○○○과	비디오프로젝터	1	3,652	2005.6.15	2004.12.21	2005.5.6	사후승인
	비디오프로젝터	1	3,223	2005.6.15	2004.12.21	2005.7.8	사후승인
○○○과	디지털캠코더	1	470	2006.6.27	2005.12.19	2006.2.9	사후승인
○○○동사무소	비디오프로젝터	1	2,500	-	2005.10.26	2005.11.24	미승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 없고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는 정수물품에 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에 대하여 우선 계상하고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취득할 수 없고,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는 데도, ○○○실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비디오프로젝터 등 4대, 9,845천 원에 대하여 정수 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2005.11.24 구입한 비디오프로젝터 1대에 대하여 정수물품 관리부서인 ○○○과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물품수급계획 등을 통하여 정수물품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가 정수승인 등 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계양구 ○○○실에서는 향후 정수물품에 대한 예산편성시 정수배정 여부를 정확히 심사하여 예산계상을 하시기 바라며, ○○○과에서는 정수물품 미승인 건에 대하여는 추가 배정 등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분야

[일련번호 : 2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도로점·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소홀

[위법부당내용]

○ 도로점·사용료 체납자 압류 미 실시 현황(2005.1.1~2006.12.31 현재)

구 분	건 수	금액 (천원)	비고
소 계	329	46,031	
차량출입시설 도로점·사용료	52	24,720	
돌출간판 도로점·사용료	277	21,311	

「도로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하여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법 제43조에 의거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점용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 제3항에 의거하여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입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제28조에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

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도로점·사용료 329건 46,031천 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을 받고도 체납이 된 경우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 및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등 도로점·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계양구 ○○○과에서는 도로점·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미발부 건 및 재산압류 미실시 건은 즉시 독촉장 발부 및 재산압류 등 시정조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도로점·사용료(차량출입시설) 장기간 체납자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 도로점·사용료(차량출입시설) 3개년 이상 장기간 체납 현황

(단위:천원)

납부자	물 건 명	체 납 액 (본세기준)				실제 도로점·사용자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	○○ 1074-3	352	416	483	558	집합(다수인)
○○○	○○ 67-7		1,085	1,200	1,322	집합(다수인)
○○○	○○ 964-57	440	497	566	644	집합(다수인)
○○○	○○ 444-1		287	325	366	집합(다수인)
○○○	○○ 968-41		137	152	171	○○○(06.8.24)
○○○	○○ 209-1	513	582	641		○○○외1(06.9.12)
○○○	○○ 905-6		456	528	608	○○○(03.5.1)
○○○	○○ 905-7		277	322	374	○○○(98.10.23)

「도로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하여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월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자 등은 그 지위를 승계

하고, 도로의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로 점·사용료 납부자 ○○개발의 7인은 최초 해당 물건지에서 도로·점사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사용하다가 현재는 타인에게 권리가 양도되어 위 물건의 차량출입시설 도로는 타인이 점용하고 있기에 실제 점·사용자에 도로점·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음으로써 3년 이상 장기간 계속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에서는 3년 이상 장기간 체납자에 대하여 허가기간 종료 여부, 권리·의무 양도 여부, 실제 거주여부 등 현장 확인·조사로 정당한 권리·의무자에게 도로 점·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도로 점·사용료 장기간 체납자에 대한 현지실태 및 확인조사를 소홀로 인하여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납부자에게 부과하는 등 장기간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계양구 ○○○과에서는 도로 점·사용료(차량출입시설)에 관련하여 장기간 체납된 납부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6]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세외수입(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대납 업무 소홀

[위법부당내용]

○ 과태료 체납액 대납현황(2005년~2006년)

구 분	대납 실시 현황				과오납금 반환시 결재 여부	비 고
	2005		2006			
	건	금액	건	금액		
계	67	3,355,000	64	3,473,100		
책임보험과태료	4	30,000	1	15,000	무	
주·정차위반과태료	59	3,065,000	61	3,358,100	무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4	260,000	2	100,000	무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책임보험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16조(주·정차위반과태료,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의 규정에 의거하여 책임보험과태료 등 3종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부과대상자가 원할 경우에 당해 ○○○과 통장으로 과태료 체납액을 입금 받은 후에 고지서를 발부하여 금융기관에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대납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과태료) 대납 업무는 관련법령이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과태료 체납금 대납업무를 통하여 상당액의 체납액을 해소하고 있고, 민원인 또한 행정기관을 신뢰하여 대납통장으로 체납액을 입금하고 있고, 입금 자체를 체납액 납부라고 믿고 있기에, 과태료 체납금 대납업무 처리상황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과태료 체납액 납부자와 대납통장에 입금자의 명의를 상이한 경우를 대비하여 전화통화시 과태료 물건, 체납자 성명, 입금자 성명, 입금자 연락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계양구 ○○○과에서는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3종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31건, 6,828,100원의 과태료 대납업무를 처리하면서, 매일 과태료 대납 처리한 체납자 성명, 대납금액 등을 대장 또는 일계표로 작성하여 명확하게 관리하여야 하나, 대납과 관련된 영수증만을 보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납부자의 대납금중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투명하고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과오납금 반환에 대한 부서장의 내부결재를 득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실제 업무를 처리하면서 부서장 결재 없이(금융기관의 거래명세표만 보관) 과오납금을 반환 처리하는 등 세외수입(과태료) 체납금 대납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계양구 ○○○과에서는 향후 세외수입(자동차 관련) 과태료 대납업무와 관련하여 과태료 대납 일계표 작성, 과오납 반환시 부서장 결재 등 대납업무 전반이 투명하고 명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교통분야

[일련번호 : 27]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1

[제 목] 승강기 정기검사 위반업소 행정처분 소홀

[위법부당내용]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승강기의 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정기검사 유효기간)에 의하면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당해 승강기에 대하여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받아야하고,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직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운행정지명령), 및 같은 법 제25조에 의거 당해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제26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05.2월부터 2006.7월까지 승강기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빌 등 58개 업소에 대해 운행정지명령만 통지하고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운행정지명령을 통지한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승강기 운행정지 및 운행정지표 부착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운행정지명령 후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빌딩 외 8개 업소와 재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채 운행한 ○○프라자 외 3개 업소 등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총 13개 업소에 대해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승강기 정기검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8]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1

[제 목] 화물자동차 차고지 미확보 차량 행정처분 소홀

[위법부당내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및 제17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하며,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차 : 사업전부정지(30일), 2차 : 허가취소

2006. 2.15부터 2007. 1.15까지 차고지 임대기간이 만료된 ○○○(○○동 34-3) 외 32명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 허가당시 신고된 차고지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기준에 미달됨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30일간의 사업전부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행정처분 사전안내 공문만 발송하는데 그치는 등 허가기준에 미달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차고지 임차기간이 종료되어 허가기준에 미달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9]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1

[제 목]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채납자에 대한 행정조치 소홀

[위법부당내용]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과태료) 및 지방세법 제28조(채납처분)에 의하면 주·정차 위반자에 대하여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며, 채납자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 조치할 수 있음에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채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장을 발송하고 소유차량에 대해 압류를 하고 있으나 이미 타 공공기관에 의해 수회에 걸쳐 압류조치 되어 실효성이 떨어짐에도 계속해서 차량압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5. 2월부터 2006.10.25까지 과년도 장기채납자에 대하여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2006.10.26 재산관리부서인 ○○○과로 채납횟수가 20회 이상인 ○○개발 외 121건에 대해 재산조회의를 한 바 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07. 1.31현재 30만 원 이상 고액채납자가 265명(채납액 163백만 원)에 이르고 이중 계양구 ○○동 ○○○외 22명은 100만원이 초과하는 등 주정차위반과태료 채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과태료 납부기한이 경과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 납부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확인된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압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0]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신청인 결격여부 조회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축산물가공처리업 제22조에 의하면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5. 3.17부터 2006. 7.10까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신청서 4건을 처리하면서 허가신청자의 결격사유를 조회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영업허가 신청자의 본적지에 신원조회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허가처리 하는 등 담당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소홀

[위법부당내용]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지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여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도출되면 기한을 정하여 개선명령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2005년도 1/4분기부터 2006년도 3/4분기까지 총 7회에 걸쳐 관내 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업무를 추진하면서 점검표를 작성하지 않아 현지 지도단속 실시여부가 불투명하고 지도점검결과를 해당업소에 통보하지 않고 방치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이 곤란하며 2006년도 4/4분기에는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향후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매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분야

[일련번호 : 3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30,408천 원

[제 목] 주민세 특별징수분 과세 소홀

[위법부당내용]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 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법 제179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의12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월 이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

수의무자가 특별징수세액을 관할 시·군에 미납입하거나 부족 납입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에서는 2005년부터 2006년도까지의 원천징수분 소득세액에 대한 주민세 특별징수세액 189건 30,408천 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1. 부과 누락된 주민세 등 30,408천 원을 추징 조치하고,
2.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73,623천 원

[제 목] 대도시내 법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세 소환

[위법부당내용]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3배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시세감면조례」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자가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제1항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를 적용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 708-2 (주)○○프라텍의 경우 2004.9.17 당초 아파트형공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동 공장 취득 후 5년 이내인 2006.11.29 ○○테크에 경락되었으므로 당초 감면받은 부동산은 과세대상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대도시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 195-25 (주)○○건설의 경우 2001.8.30 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에 미착공하였으므로 당해 토지는 대도시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취득 등기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 866-32 (주)○○바이오의 경우 위 ○○동 866-32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본점을 이전하였으므로 당해 신축건물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취득세 및 등록세 등 합계 73,623천 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과세 누락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73,623천 원을 추징 조치하고,
2.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제 목]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및 독촉 불이행

[위법부당내용]

지방세법 제18조 제1항에서 공유물(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 ·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제2항에서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분할되는 법인·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연대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입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3항 단서에 의하면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1998.9.4 선고 96다 31697 판결”에서도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발생 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하고,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세자 모두에게 납세의 고지와 독촉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에서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의 지방세 66건, 87,466천 원에 대하여 납세고지 및 독촉을 함에 있어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해서만 납세고지 및 독촉을 하였을 뿐 그 이외의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납세고지 및 독촉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앞으로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시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 대하여 납세고지 및 독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2. 그 납세고지 방법과 관련하여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총 세액을 기재하고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첨부하여 한 납세고지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1993.12.21. 선고 93누10316 판결) 등을 참조하여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없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분야

[일련번호 : 3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사회복지법인 재산관리 및 복지시설 지도감독 소홀

[위법부당내용]

○ 사회복지법인 현황

법인명(대표자)	소재지	설립일	주요사업	법인산하시설
○○○	○○동 694-20	1985. 9. 4	노인복지사업	
○○○	○○동 130-6	1977. 1.28	노인·아동 복지사업	

○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정산보고 지연현황

시설명	정산기간	보고일자	지연일
○○○ 사회복지관	2005년 하반기	2006. 2. 10	31일 초과
	2006년 상반기	2006. 7. 13	3일 초과
	2006년 하반기	2007. 1. 19	9일 초과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함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대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에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 되어 있음에도

사회복지법인 ○○○재단의 재산인 인천광역시 ○○동 696-20번지상 건물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압류(2005.3.17, 세정13410-3195) 및 해제(2005.4.14)되었고, 재단법인□□대한 □□회□□재단으로부터 동 재산이 복지재단으로 증여(2006.9.11, 소유권이전)되어 재산 변동사항이 발생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관련법에 의거 주무관청에 보고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매반기 종료 후 10일이내에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관에서는 최소3일에서 최장31일이 경과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계양구청(○○○과)에서는 법인재산의 소유권이전으로 권리변동사항이 발생되었고, 복지시설의 후원금 수입지출사항을 지연보고를 했음에도 적법한 조치나 지도·점검 없이 이를 방치하였고, 법인의 예산편성 및 결산서를 20일 이상 구 게시판에,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는 매반기 30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는등 사회복지법인 재산관리 및 복지시설 지도 감독 등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교육 또는 홍보를 실시하여 재산변동 등 각종 보고기일 등이 관련 규정에 맞게 준수될 수 있도록 하시고, 법인 및 시설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6]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조치에 따른 행정절차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 환수대상자 현황

연번	납 부 자		부당이득금현황(단위:원)			징수결의	비 고
	성명	소재지	징수결정액	상환액	채납액		
계			55,286,360	1,240,000	54,046,360		
1		부평 ○○동 799-24	2,703,880		2,703,000	‘05.12.13	구상금
2		계양 ○○동201	861,190		861,190	‘05.11.15	
3		계양 ○○동123-53	26,014,690		26,014,690	‘06. 1.10	
4		계양 ○○ 968-11	2,473,460	1,200,000	1,273,460	”	
5		계양 ○○동871-9	393,570		393,570	”	
6		계양 ○○동34-5	5,560,910		5,560,910	”	
7		계양 ○○동978-33	440,920		440,920	”	
8		계양 ○○동360	43,050		43,050	”	
9		계양 ○○동273-24	2,631,110		2,631,110	‘06. 1.17	
10		계양 ○○3동49-4	4,595,720		4,595,720	‘06. 1.31	
11		계양 ○○동66-2	5,373,940		5,373,940	‘06. 4.27	
12		계양 ○○동33-2	975,120	40,000	935,120	‘06. 6.20	
13		계양 ○○동66-2	919,090		919,090	‘06. 6.20	구상금
14		서구 ○○동519	2,299,710		2,299,710	‘06. 6.20	구상금

의료급여법 제15조(급여의 제한)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제한하며, 동법 제23조에 의거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독촉장 발부 및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함에도

2005. 11. 15일 이후 발생한 14건의 부당수급자에 대하여 형식적인 독촉등 미온적으로 처리하였으며, 고액 체납자 ○○○(계양구 효성동 거주)의 경우 감사일 현재까지 고지금액이 미납되었으나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한 독촉을 하지 않는 등 행정상 절차를 미 이행하는 등 의료보호대불금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고질적인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납부독촉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앞으로 의료보호 대불금 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7]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9,504천 원(환수)

[신분상 조치] 훈계3

[제 목] 사망자에 대한 노인교통수당 지급 부적정 및 환수조치 소홀

[위법부당내용]

○ 현 황

- 노인교통수당 수급권 상실기준 부적정으로 인한 환수대상 현황 : 붙임1
- 사망으로 인한 노인교통수당 환수대상 현황 : 붙임2

가. 노인교통수당 수급권 상실기준 부적정으로 인한 부당지급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분기 첫달(1,4,7,10월) 20일에 지급되는 노인교통 수당이 보건복지부 지침(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질의응답 사례집, 2004. 5)에 의하면 노인교통수당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 상실(지급정지) 기준은 '사망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05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면서 효성1동 ○○○외 87명에 대해 수급권 상실기준을 사망일로 하지 않고 사망신고일 또는 사망자에 대한 정리 없이 지급함에 따라 노인교통수당 3,930천 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사망자에 대한 노인교통수당 환수조치 소홀

인천광역시 노인교통수당 지침에 의거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수급권을 상실하였다면 지급을 중지하고, 사망일을 기준으로 매분

기 첫달 19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 지급한 노인교통수당을 환수조치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2005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면서 효성1동 ○○○외 158명은 매분기 첫 달 19일 이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기 지급된 노인교통수당 5,574천원을 환수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부당하게 지급된 노인교통수당 9,504천 원을 회수 조치하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인교통수당 지급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통수당 수급권 상실 기준부적정으로 인한 환수대상 현황

(사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급)

연번	주소	성명	사망일	사망신고일	환수대상분기	부당지급액
1	효성1동		05.03.28	05.04.04	05.2/4	36,000
2			05.06.29	05.07.05	05.3/4	36,000
3			05.06.12	05.07.07	05.3/4	36,000
4			05.09.20	05.10.11	05.4/4	36,000
5			05.09.28	05.10.21	06.4/4	36,000
6			05.12.07	06.01.02	06.1/4	36,000
7			05.12.31	03.01.23	06.1/4,2/4	72,000
8			06.02.22	06.06.14	06.2/4	36,000
9			06.09.12	06.10.02	06.4/4	36,000
10			06.09.27	06.10.10	06.4/4	36,000
11			06.09.16	06.10.16	06.4/4	36,000
12	효성2동		06.03.08	06.08.17	06.2/4,3/4	72,000
13			06.06.28	06.07.04	06.3/4	36,000
14			06.03.30	06.04.28	06.2/4	36,000
15			06.06.14	06.11.23	06.3/4,4/4	72,000
16			05.07.30	05.12.26	05.4/4	36,000
17	계산1동		05.03.18	05.04.11	05.2/4	36,000
18			05.03.30	05.05.21	05.2/4	36,000
19			05.02.24	05.03.02	05.2/4,3/4	72,000
20			05.07.20	05.08.16	05.4/4	36,000
21			05.12.21	06.01.09	06.1/4	36,000
22			06.03.12	06.04.06	06.2/4	36,000
23			06.06.29	06.07.05	06.3/4	36,000
24			06.08.25	06.11.29	06.4/4	36,000
25	계산2동		06.06.21	06.07.04	06.3/4	36,000
26			05.09.22	05.10.18	05.4/4	36,000
27			06.09.24	06.10.23	06.4/4	48,000
28			05.03.24	05.04.02	05.2/4	36,000
29			06.03.30	06.04.03	06.2/4	36,000
30			05.12.09	06.02.13	06.1/4	36,000
31			05.07.19	05.12.12	05.4/4	42,000
32			05.12.18	06.01.04	06.1/4	36,000
33			05.09.29	05.10.06	06.4/4	36,000
34			06.09.11	06.10.10	06.4/4	48,000
35			06.03.22	06.04.10	06.2/4	48,000
36			06.08.28	06.10.02	06.4/4	36,000
37	계산3동		05.03.06	05.04.06	05.2/4	36,000
38			05.03.10	05.04.16	05.2/4	36,000
39			05.03.26	05.04.25	05.2/4	36,000
40			05.06.15	05.07.07	05.3/4	36,000
41			05.12.16	06.01.23	06.1/4	36,000
42			06.09.04	06.12.12	06.4/4	48,000

연번	주소	성명	사망일	사망신고일	환수대상분기	부당지급액
43	용종동		06.09.27	06.11.30	06.4/4	36,000
44			06.07.02	06.07.07	06.3/4,4/4	72,000
45			06.06.11	06.07.10	06.3/4	48,000
46	작전1동		05.03.31	05.04.04	05.2/4	36,000
47			05.03.25	05.04.12	05.2/4	36,000
48			05.06.23	05.07.06	05.3/4	36,000
49			05.09.28	05.10.04	05.4/4	36,000
50			05.09.18	05.10.11	05.4/4	36,000
51			05.09.28	05.10.27	05.4/4	36,000
52			05.05.07	05.11.08	05.3/4,4/4	72,000
53			05.12.27	06.01.02	06.1/4	36,000
54			05.12.19	06.01.03	06.1/4	36,000
55			05.12.23	06.01.05	06.1/4	36,000
56			05.12.26	06.01.18	06.1/4	36,000
57			05.03.27	06.01.25	05.2/4,3/4,4/4.06.1/4	144,000
58			06.03.31	06.04.18	06.2/4	48,000
59			06.06.30	06.07.03	06.3/4	36,000
60			06.09.28	06.10.09	06.4/4	36,000
61			06.09.29	06.10.10	06.4/4	36,000
62			06.09.28	06.10.26	06.4/4	36,000
63	작전2동		06.03.31	06.04.04	06.2/4	36,000
64			05.11.25	06.01.12	06.1/4	36,000
65			05.03.24	05.04.04	05.2/4	36,000
66			06.09.24	06.10.23	06.4/4	36,000
67			06.09.30	06.10.16	06.4/4	36,000
68			05.01.30	05.04.22	05.2/4	36,000
69			05.06.30	05.07.04	05.2/4	36,000
70			06.03.28	06.06.27	06.2/4	36,000
71			06.09.28	06.10.18	06.4/4	36,000
72			05.09.13	05.05.23	05.4/4,06.1/4,2/4,3/4,4/4	180,000
73			05.03.28	05.08.01	05.2/4	36,000
74	작전서운동		06.09.27	06.10.19	06.4/4	36,000
75	오류동		06.03.12	06.06.12	06.2/4	36,000
76			06.09.30	06.10.18	06.4/4	36,000
77	동양동		06.08.31	06.10.17	06.4/4	36,000
78	계양2동		04.09.16	05.05.26	05.1/4,2/4	72,000
79			04.06.26	05.06.30	05.1/4,2/4	72,000
80			05.05.11	05.08.17	05.3/4	36,000
81			05.02.25	05.08.23	05.2/4,3/4	72,000
82			06.03.31	06.04.25	06.2/4	36,000
83			06.03.29	06.05.30	06.2/4	36,000
84			06.06.29	06.07.19	06.3/4	36,000
85			06.09.28	06.10.18	06.4/4	36,000
86			06.09.27	06.10.23	06.4/4	36,000
87			06.09.24	06.10.24	06.4/4	36,000
88			05.11.06	07.01.23	06.1/4,2/4,3/4,4/4	144,000
계						3,930,000

사망으로 인한 노인교통수당 환수대상자 현황
(매분기 첫달 19일 이전 사망자)

연번	주소	성명	사망일	사망신고일	환수대상분기	부당지급액
1	효성1동		05.04.14	05.04.19	05.2/4	36,000
2			05.04.14	05.04.21	05.2/4	36,000
3			05.04.18	05.04.21	05.2/4	36,000
4			05.04.17	05.04.26	05.2/4	36,000
5			05.07.06	05.07.12	05.3/4	36,000
6			05.07.10	05.07.19	05.3/4	36,000
7			05.07.10	05.07.27	05.3/4	36,000
8			07.07.16	05.08.01	05.3/4	36,000
9			05.07.11	05.08.04	05.3/4	36,000
10			05.10.04	05.10.10	05.4/4	36,000
11			05.10.10	05.10.14	05.4/4	36,000
12			05.10.15	05.10.20	05.4/4	36,000
13			06.01.03	06.01.06	06.1/4	48,000
14			06.01.04	06.01.09	06.1/4	36,000
15			06.01.03	06.01.11	06.1/4	36,000
16			06.01.01	06.01.16	06.1/4	36,000
17			06.01.13	06.01.20	06.1/4	36,000
18			06.01.16	06.01.23	06.1/4	36,000
19			06.04.16	06.04.19	06.2/4	36,000
20			06.04.15	06.04.19	06.2/4	36,000
21			06.04.16	06.04.19	06.2/4	36,000
22			06.04.18	06.05.01	06.2/4	36,000
23			06.07.03	06.07.07	06.3/4	36,000
24			06.07.15	06.07.20	06.3/4	36,000
25	효성2동		06.04.10	06.04.13	06.2/4	36,000
26			06.07.12	06.08.01	06.3/4	36,000
27			05.10.13	05.11.09	05.4/4	36,000
28			05.01.11	05.02.04	05.1/4	36,000
29			05.04.13	05.04.19	05.2/4	36,000
30			05.07.08	05.07.15	05.3/4	36,000
31			05.10.16	05.10.19	05.4/4	36,000
32			05.04.12	05.04.30	05.2/4	36,000
33			06.04.04	06.04.11	06.2/4	36,000
34			05.01.11	05.10.24	05.4/4	36,000
35			06.10.16	06.10.19	06.4/4	36,000
36			06.04.09	06.04.14	06.2/4	36,000
37			06.07.07	06.07.18	06.3/4	36,000
38			06.07.17	06.07.20	06.3/4	36,000
39			05.10.01	05.10.21	05.4/4	36,000
40			06.07.04	06.07.19	06.3/4	36,000
41						

연번	주소	성명	사망일	사망신고일	환수대상분기	부당지급액
42	효성2동		06.01.17	06.01.17	06.1/4	36,000
43			05.07.12	05.07.22	05.3/4	36,000
44			05.10.06	05.10.19	05.4/4	36,000
45			06.01.12	06.01.17	06.1/4	36,000
46	계산1동		05.04.18	05.04.22	05.2/4	36,000
47			05.01.09	05.02.02	05.1/4	36,000
48			05.04.19	05.04.27	05.2/4	36,000
49			05.04.01	05.04.04	05.2/4	36,000
50			05.07.05	05.07.25	05.3/4	36,000
51			05.07.03	05.07.28	05.3/4	36,000
52			05.10.01	05.10.10	05.4/4	36,000
53			05.04.09	05.05.09	05.2/4	36,000
54			05.07.11	05.07.28	05.3/4	36,000
55			05.10.13	05.10.18	05.4/4	36,000
56			05.01.03	05.02.25	05.1/4	36,000
57			05.10.12	05.10.17	05.4/4	42,000
58			05.10.03	05.11.02	05.4/4	36,000
59			06.01.01	06.01.12	06.1/4	36,000
60			06.01.03	06.01.13	06.1/4	36,000
61			06.01.11	06.01.16	06.1/4	36,000
62			06.04.08	06.04.12	06.2/4	36,000
63			06.04.10	06.04.14	06.2/4	48,000
64			06.04.15	06.04.27	06.2/4	36,000
65			06.04.06	06.05.12	06.2/4	36,000
66			06.04.18	06.06.30	06.2/4	36,000
67			06.10.12	06.10.09	06.4/4	36,000
68			06.10.07	06.10.13	06.4/4	36,000
69	계산2동		06.07.06	06.07.14	06.3/4	36,000
70			06.01.06	06.01.09	06.1/4	36,000
71			06.04.17	06.05.01	06.2/4	36,000
72			05.04.13	05.04.29	05.2/4	36,000
73			05.07.11	05.07.20	05.3/4	42,000
74			06.01.07	06.01.12	06.1/4	36,000
75			06.04.17	06.05.10	06.2/4	36,000
76			05.01.15	05.02.11	05.1/4	36,000
77			06.04.17	06.04.27	06.2/4	36,000
78			05.04.15	05.05.12	05.2/4	36,000
79			05.10.16	05.10.19	05.4/4	36,000
80			05.10.07	05.10.10	05.4/4	36,000
81			06.04.09	06.04.12	06.2/4	36,000
82	계산3동		05.07.08	05.07.21	05.3/4	36,000
83			06.01.04	06.01.23	06.1/4	36,000
84			06.01.14	06.01.26	06.1/4	36,000
85			06.10.01	06.11.02	06.4/4	36,000
86			06.10.17	06.11.02	06.4/4	36,000
87	계산동		06.07.09	06.08.16	06.3/4	36,000
88	작전1동		05.04.03	05.04.06	05.2/4	36,000

연번	주소	성명	사망일	사망신고일	환수대상분기	부당지급액
89			05.04.03	05.04.06	05.2/4	36,000
90			05.04.02	05.04.11	05.2/4	36,000
91			05.04.05	05.04.21	05.2/4	36,000
92			05.04.18	05.04.28	05.2/4	36,000
93			05.04.13	05.05.12	05.2/4	36,000
94			05.07.16	05.07.19	05.3/4	36,000
95			05.01.03	05.01.09	05.1/4	36,000
96			06.01.12	06.01.18	06.1/4	36,000
97			06.01.03	06.01.19	06.1/4	36,000
98			06.01.15	06.02.01	06.1/4	36,000
99			06.01.18	06.02.02	06.1/4	36,000
100			06.04.18	06.04.21	06.2/4	36,000
101			06.04.12	06.04.21	06.2/4	36,000
102			06.07.10	06.07.20	06.3/4	36,000
103			06.07.12	06.07.20	06.3/4	36,000
104			06.07.18	06.07.24	06.3/4	36,000
105			06.07.08	06.07.25	06.3/4	36,000
106			06.07.02	06.08.01	06.3/4	36,000
107			06.07.11	06.08.03	06.3/4	36,000
108			06.10.10	06.10.13	06.4/4	36,000
109			06.10.08	06.10.17	06.4/4	36,000
110			06.10.15	06.10.23	06.4/4	36,000
111			06.10.18	06.10.27	06.4/4	36,000
112	작전2동		06.07.14	06.07.18	06.3/4	48,000
113			06.07.05	06.07.10	06.3/4	36,000
114			06.04.12	06.04.26	06.2/4	48,000
115			06.01.02	06.02.01	06.1/4	36,000
116			06.07.01	06.07.06	06.3/4	36,000
117			05.07.11	05.07.15	05.3/4	42,000
118			05.10.10	05.10.13	05.4/4	36,000
119			06.01.03	06.01.06	06.1/4	36,000
120			06.10.13	06.11.09	06.4/4	36,000
121			06.01.09	06.01.18	06.1/4	36,000
122			05.04.10	05.05.02	05.2/4	36,000
123			05.04.02	05.04.19	05.2/4	36,000
124			06.07.13	06.08.11	06.3/4	36,000
125			06.10.08	06.10.11	06.4/4	36,000
126			05.04.13	05.04.13	05.2/4	42,000
127			05.04.15	05.05.18	05.2/4	36,000
128	작전서운동		05.04.16	05.04.20	05.2/4	36,000
129			06.04.15	06.04.21	06.2/4	36,000
130			06.10.05	06.10.20	06.4/4	36,000
131			06.10.11	06.10.30	06.4/4	36,000
132			06.10.03	06.11.03	06.4/4	36,000
133	박촌동		05.04.15	05.04.21	05.2/4	36,000
134			06.01.09	06.01.16	06.1/4	36,000
135			06.07.04	06.07.19	06.3/4	36,000

연번	주소	성명	사망일	사망신고일	환수대상분기	부당지급액
136	박촌동		06.10.11	06.10.16	06.4/4	36,000
137			06.10.10	06.10.19	06.4/4	36,000
138			06.10.15	06.10.27	06.4/4	36,000
139	이화동		05.04.14	05.04.25	05.2/4	36,000
140	선주지동		05.07.02	05.08.17	05.3/4	36,000
141	오류동		06.07.15	06.07.19	06.3/4	36,000
142			06.10.08	06.10.26	06.4/4	36,000
143	계양2동		05.04.15	05.04.21	05.2/4	36,000
144			05.04.05	05.04.21	05.2/4	36,000
145			05.04.13	05.04.21	05.2/4	36,000
146			05.04.19	05.04.25	05.2/4	36,000
147			05.04.15	05.04.27	05.2/4	36,000
148			05.07.06	05.07.22	05.3/4	36,000
149			05.07.19	05.07.22	05.3/4	36,000
150			05.07.12	05.08.10	05.3/4	36,000
151	계양2동		05.10.14	05.10.20	05.4/4	36,000
152			06.04.11	06.04.26	06.2/4	36,000
153			06.04.16	06.05.10	06.2/4	36,000
154			06.07.14	06.07.19	06.3/4	36,000
155			06.07.11	06.07.19	06.3/4	36,000
156			06.07.18	06.07.21	06.3/4	36,000
157			06.07.02	06.07.24	06.3/4	36,000
158			06.10.09	06.10.16	06.4/4	36,000
159			06.10.18	06.10.24	06.4/4	36,000
계						5,574,000

[일련번호 : 38]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민원사무처리편람 제작 소홀

[위법부당내용]

○ 조직개편현황 (2006. 7. 1일자)

구 분	조직개편내용		비 고
	당 초	변 경	
명 칭 변 경	문화공보실	문화공보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배치
	총 무 국	자치행정국	
	총 무 과	자치행정과	
	민원자치과	민원여권과	
	사회산업국	주민생활지원국	
	도 시 국	도시개발국	
폐지및신설	사회복지과 (폐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 팀명칭 변경 : 7개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개편 시군구 1단계 조직개편(행정자치부 조직개편 지침시달, 2006.4.19)에 의거 계양구에서는 2006년 7. 1일자로 명칭변경 3국 2과 7팀, 폐지 1과, 신설 2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구청의 각종 조례, 규칙, 규정 등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7조 및 계양구민원사무처리규정 제6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편람을 비치하여 민원인이 항상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관계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및 조직개편 등으로 그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계상도 하지 않고 단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민원사무편람을 정비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민원사무편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개편된 조직 및 변경된 민원사무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하여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민원사무편람을 제작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분야

[일련번호 : 39]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1.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하여야 함에도, 유사한 종류의 홍보물 제작·구입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운영

2005년 및 2006년 건강증진사업안내 및 건강증진사업계획 수립지침(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 및 운동정보 제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구 단위의 자체 홍보물 개발은 가급적 지양하고,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에서 개발한 홍보물을 활용한 홍보사업을 위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위 지침에 따라 군수·구청장은 교육·홍보 관련 인쇄물이나 기념품을 제작·구매함에 있어 단순 소모성 물품이 아닌 6개월 이상 사용가능한 물품으로 제작·구매하되, 당해 사업 추진목적에 부합하며 효율성·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물품을 제작·구매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양구 ○○○과에서 추진한 2005년 및 2006년도 건강증진사업 중 각종 홍보물 제작·구입 실태를 살펴본 결과(1회 100만 원이상 지출 건수만 뽑은 자료임), 2005년도에는 금연 홍보물(포스터 및 판넬, 1,104천 원), 건강생활실천 홍보물(볼펜, 1,867천 원), 건강생활실천사업 홍보물(비누, 금연 스

카프, 11,640천 원), 금연 홍보물(판넬, 2,185천 원), 운동 홍보물(2,600천 원), 금연홍보물(리플렛, 1,760천 원), 건강증진 달력(5,700천 원), 건강증진 책자(스트레칭, 3,180천 원), 고혈압 홍보물(1,521천 원), 건강관리수첩(2,000천 원), 금연홍보책자(2,618천 원), 금연홍보책자(2,420천 원), 모유수유 홍보물(1,920천 원), 임신·출산 등 안내책자(2,100천 원), 영양판넬 및 리플렛(1,713천 원), 장애인 편견 해소 홍보물(4,000천 원) 등 총 16건에 걸쳐 48,328천 원 상당의 홍보물을 제작·구입하였고,

2006년도에는 운동영양관리수첩(4,612천 원), 절주사업 홍보물(마우스패드, 4,200천 원), 운동 홍보물(4,680천 원), 이유식 홍보물(2,830천 원), 금연스티커(1,436천 원), 금연 리플렛(2,500천 원), 건강증진 홍보물(3,900천 원), 건강증진 패넬(1,425천 원), 절주 홍보물(소책자 2,080천 원), 절주 리플렛(960천 원), 건강걷기 안내판(4,620천 원), 금연홍보물(4,884천 원), 금연패치 봉투(1,500천 원), 금연 홍보물(4,851천 원), 금연 홍보물(4,540천 원), 금연 홍보물(1,914천 원), 금연 홍보수첩(3,360천 원), 금연 달력(4,600천 원), 금연 홍보수첩(3,360천 원), 금연 홍보봉투(3,519천 원), 흡연예방 홍보물(4,413천 원), 금연 홍보물(3,980천 원), 금연 홍보수첩(3,648천 원), 모유수유 홍보책자(1,600천 원), 모유수유 홍보물(2,000천 원), 치매예방 홍보물(1,470천 원), 구강보건실 홍보물(1,800천 원) 등 총 27건에 걸쳐 84,682천 원 상당의 홍보물을 제작·구입하였으며,

더욱이 2006년도에 금연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버스광고료 11,000천 원(버스외부 광고 7,700천 원, 버스 손잡이 3,300천 원)을 (주)○○기획과 (주)□□기획프라임 등 2개 업체와 계약·지출하였는바, 계양구에서는 계양구를 주로 운행하는 버스회사 4개소에 광고를 하였다고는 하나,

2006년 타 군·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연수구를 비롯한 일부 구에서 이와 상당한 액수의 버스광고료를 지출하였고, 관내버스 대부분이 특정 군·구를 운행구간으로 하지 않고 시 전역을 운행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자치단체별로 버스광고료 예산을 책정·지출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측면에서 상당히 부적정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2. 각종 사업을 위한 강사를 선정함에 있어 특정단체에만 추천의뢰를 하여 선정하고, 구체적인 자격기준이 없이 관련분야 자격증이나 인증서가 있다는 사유로 특정인을 임의 선정

아울러 2005년 및 2006년 건강증진사업안내 및 건강증진사업계획 수립지침(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추진함에 있어서 교육 가능기관을 파악,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교육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매년 교육 대상자를 파악하고 대상자를 확정하여 대상자의 계층별·분야별 인력 풀(pool)을 구성하여 교안 집필을 의뢰하는 등 사전에 교육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계획·준비하여야 하며,

강사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강사 선정 시에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교육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다수의 전문가를 추천받아 선정을 하여야 하며, 또한 매년말 또는 매분기별로 교육 프로그램이나 강의의 만족도 등 교육 전반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강사는 교체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하여야 함에도,

계양구의 2005년도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강사 선정 및 강사료 지급 실태를 살펴본 결과,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외에 9개 교실에서 21명에 대하여 총 17,150천 원을 지급하면서, 강사 추천 의뢰는 (사)한국○○○협회 등 일부 기관·단체에만 의뢰를 하였고, 2006년도에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외 10개 교실을 운영하면서 20명에 대하여 총 15,800천 원의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역시 (사)한국○○○협회 등 일부 기관·단체에만 추천 의뢰를 하였으며,

더욱이 위 (사)한국○○○협회는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일반인들에게 몇 주간의 상담교육을 시킨 후에 각 시·도에 흡연예방 및 금연교실 강사로 추천하여 주고 있어 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이나 효율성 등의 보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 분 요 구]

1. 향후 건강증진사업 등 각종 보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종 홍보물을 제작·구입할 경우, 타 자치단체와의 중복여부, 사업의 효율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작·구입하되, 유사한 홍보물은 통합하여 일괄 제작·구매하는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시행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강사선정을 함에 있어 매년 교육 대상자를 파악하고, 대상자의 계층별·분야별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하시기 바라며, 관련 교육기관이나 전문단체 등으로부터 다수의 전문가를 추천받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금번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전말 제출 시 동 건에 대한 조치계획(2007년도 홍보물 제작·구매 계획, 강사선정 개선방안 등)을 수립·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0]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1

[제 목] 방역장비 및 약품·소모품 등 구매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방역장비나 교육교재 등을 구매함에 있어 연간 구입비용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자견적에 의하여 구매를 하여야 함에도 특정업체에서만 견적을 받고 수의구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행자부예규 204호, 2006.2.7)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각종 물품을 구입할 경우 구매금액이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수의계약대상자 중에서 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5일)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위 법률 시행이전에는 행정자치부 재정경제과-516(2005.2.3)호와 사회계과-1719(2005.2.11)호에 따라 계약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모든 수의계약은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그 내역을 공개하고, 이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수의계약내역 공개방”을 설치하고 공개시기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공개기간은 계약종료 후 3년까지 공개토록 권고·시달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양구 보건소에서는 어린이 영양교실 교육자료를 구매함에 있어 2006.4.6. (주)○○에듀케이션으로부터 4,800천 원, 2006.7.27. 동일 업체로부터 3,000천 원, 이와 유사한 비만영양교실 및 이유식 시연회 교육자료를 2006.7.19. 및 2006.9.1. ○○○(주)에서 1,250천 원과 1,200천 원 상당의 교육자료를 전자전 적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업체로부터 수의 구매하였고,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홍보물을 구매함에 있어, 2006.11.30.에 ○○디자인 센터에서 각각 4,413천 원과 3,980천 원 상당의 홍보물을 수의 구매하였으며,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위한 장비 및약품·소모품 등을 구매함에 있어 2006.3.30. (주)○○팜넷에서 1,460천 원 상당의 약품을 구매하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11,914천 원 상당의 장비·약품·소모품 등을 수의 구매하였으며,

총 20,113천 원 상당의 방역장비(휴대용 연막기 3대 및 초미립자 살포기 1 대)를 구입하면서 단지 특허를 받았다는 사유로 (주)○○정밀방제에서 수의구 매를 하였는바, 위 법령 규정에 의하면 특허를 받은 경우에도 적절한 대체용품 이 없는 경우에만 수의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 토를 소홀히 하여 수의 구매를 하는 등 각종 장비, 약품 및 소모품을 부적정하 게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더욱이 특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상의 특허 출원인과 상기 업 체의 대표자가 상이하여 본 제품의 특허 여부가 불명확함)

아울러 2005.5.16. “건강생활실천 홍보물제작(11,640천 원, ○○디자인)”, 2005.10.25. “2006년도 건강증진 달력(5,700천 원, ○○화학)”, 2005.9.1.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용 물품구입(5,225천 원, ○○상사)”,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차량임대(13,500천 원, ○○렌터카 부천점)”,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지원(8,500 천 원, ○○대 산학협력단)”등 총 6~7건의 수의계약 내역을 구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는 등 수의계약 운용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향후 각종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방역장비나 약품·소모품 등을 구매함에 있어서 매년 연초에 보건소 전체의 소요량을 파악, 전자견적이나 입찰을 통하여 구매하시기 바라며, 부득이 수의계약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홈페이지 등에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위 행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지침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로 징계의결 요구 사유에 해당하나, 타 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고 있는 점, 해당 품목들이 유사하기는 하나 동일 품목이 아니며 수의계약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기준금액 이하로 나누어 구매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수의구매한 방역장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금회에 한하여 엄중 주의를 촉구하오니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의료 과대광고 등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경고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행정처분만 하고 고발조치 미 이행

의료법 제46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행위를 하지 못하며, 또한 같은법 제47조 규정에 의하면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학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예방의학적·임상의학적 연구결과, 기능, 약효, 진료 또는 조산방법 등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는 의료광고의 범위로서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전화번호, 진료일, 의료전문인력 및 장비, 의료인의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임상경력 등에 대해서만 광고를 하되,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의하여 광고를 할 수 있으나 일간지에는 월 2회 이상 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9조 규정에 따르면 이를 위반하여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

력에 관하여 과대광고나 허위광고를 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각각 업무정지 1월과 업무정지 2월의 처분을, 그리고 의료광고의 범위를 일탈하여 광고행위를 한 때에는 경고처분과 함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양구 ○○○과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과대광고 행위로 민원접수되어 시로부터 이첩된 ○○외과의원(○○동 1063-14, 개설자 : ○○○외 1) 등 14개 의료기관에 대하여 2005.11.28.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2005.10.27. 헌법재판부의 의료광고 행위에 대한 위헌판결과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1535호. 2004.4.30.)나 시 지침(보건정책과-9164호. 2005.7.22)을 근거로 “경고”처분만 하고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받고 “경고”처분만 하였으나,

위 공문으로 시달된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조치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광고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으로 의학적으로 합당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자제하되, 허위·과대광고 또는 자신만의 특허·기술, 수술비 할인, 경품증정 기타 수술전후 혐오감을 주는 사진 게재 등의 비윤리적인 내용의 광고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확행”하도록 하였는바,

위 이첩 통보된 14개 의료기관 중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항문질환 최상의 클리닉을 제공하며 수술 전·후의 혐오스러운 사진을 게재”, “원장 등 의료인의 약력사항 상세히 소개”, “음경확대클리닉, 요실금클리닉, 신경성 두통전문 클리닉” 등 의료법상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진료과목을 임의로 표기하는 등 의료법 위반행위를 한 것이 명백함에도 “경고”처분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인으로 하여금 면허범위를 일탈한 의료행위(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를 하여 적발·통보된 “○○신경외과 의원(○○동 852-32, 개설자 : ○○○, 위반행위자 : 간호조무사 ○○○)에 대하여, 의료법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월, 의료인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3월, 위반행위자는 자격정지 3월 및 고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의료인(개설자)에 대해서 자격정지 3월과 위반행위자에 대해 고발 및 자격정지 3월 처분을 의뢰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하지 아니하는 등 의료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약사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행정처분만하고 고발조치 미 이행

약사법 제38조 규정에 따르면 약국개설자·의약품제조업자·수입자 및 의약품판매업자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하여 저장 또는 진열하고, 변질·변패·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규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양구 ○○○과에서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거나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품과 혼합 보관하다가 적발된 ○○약국외 2개소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만하고 고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향후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경중이나 고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송치)하되, 의료광고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고질적·비윤리적인 과대·허위 광고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발(송치) 조치를 확행 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위 행위는 의료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사유에 해당하나, 귀 보건소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의료광고 행위에 대하여 위헌판결 사례가 있었던 점, 인터넷을 통한 의료광고 위반행위 제보로 시에 민원 접수된 후 일괄 이첩되어 특정 의료기관만 고발조치가 어려웠던 점, 타 자치단체에서도 고발조치를 이행치 않은 점과 정부합동감사 등 관계부처의 감사처분사례 등을 감안 금회에 한하여 엄중 주의를 촉구하오니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1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를 처분함에 있어 고발(송치)을 병과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거나 행정처분 기준과 상이하게 행정처분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제10조(표시기준), 제19조(자가품질검사의무), 제22조(영업의 허가 등), 제26조(건강진단),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식품위생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식품을 취급함에 있어 위생적으로 취급하여야 하고, 표시기준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취급할 수 없으며,

당해 업소에서 제조한 제품에 대해서는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여야 하고, 또한 업종별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벌칙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 또는 송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양구의 2005년 및 2006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실태를 살펴본 결과, 2005년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여 적발된 보성녹돈 계양점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0개소와 2006년 동일 위반행위로 적발된 ○○○ 제과점 등 25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과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과태료 처분만 하였고,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판매한 ○○마트에 대해서는 품목제조정지 1월 (소분업의 경우 영업정지 10일 상당) 및 당해제품 폐기명령을 하여야 함에도 영업정지 7일과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으며, 시설기준 위반(급수시설인 지하수 수질기준 2회 부적합)으로 적발된 ○○농산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허가취소 처분을 하였고,

제조식품의 성분 및 배합비율을 표시함에 있어 품목제조보고 사항과 제품의 표시사항이 상이한 경우에는 품목제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품목제조정지 1월의 처분과 함께 과태료 200만 원의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동일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식품과 ○○○ 등 2개소에 대하여 품목제조 보고사항을 임의 변경한 것으로 해석하여 시정명령과 품목제조정지 1월의 처분만 하였으며,

또한 위 법조항을 포함한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률에 벌칙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 또는 송치하여야 하나, 현실 여건상 영업자 준수사항 중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나 송치를 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고발조치나 송치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제조품목 전 항목에 대하여 자가 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조식품에 사용하는 원료를 유통기한이 경과된 재료를 사용하거나 성분이나 배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고의적 행위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송치를 확행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적정하게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법 제65조의2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6조(폐기처분 등), 제58조(허가의 취소 등), 제59조(품목의 제조정지 등), 제62조(폐쇄조치 등), 제65조(과징금 처분) 등의 위반행위를 한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영업소와 식품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령 제34조 :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 공표)에 따라 공표하여야 함에도,

2006.2.13. 감사일 현재 계양구 홈페이지의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개내역을 살펴본 결과 유흥주점 ○○○외 11개 업소에 대해서만 공표하는 등 위반업소에 대한 공표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향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처분하되,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고의성이 있거나 당해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고발(송치)을 확행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점과 허가취소 처분한 이삭농산의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당사자의 피해가 너무 큰 점을 감안할 때에 마땅히 지방공무원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사유에 해당하나,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해당업소를 봐주는 식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되며, 또한 한편으로는 영업신고 시 적정한 급수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회에 한하여 엄중 주의를 촉구하니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은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교육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식품제조·가공업소 허가 시 부득이하게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영업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하여야 함에도 이를 조치하지 아니하고 방치

식품위생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르면 식품위생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3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계양구의 2005년 및 2006년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영업신고 업무처리실태를 살펴본 결과, 2005년에는 (주)○○통상 등 총 16개 업소와 2006년 ○○○손국수 등 총 10개 업소에 대한 영업신고를 수리하였는바,

이들 신규 업소들에 대해서는 영업신고 시에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하였으면 신고 수리 후 3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안내 및 지도를 하여야 하고, 해당 교육기관인 관련 단체에도 즉시 통보하여 신규 영업자가 위생교육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영업신고 수리 후 영업자의 위생교육 수료여부 확인과 미수료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교육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향후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위생업소 허가나 신고 시 사전에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3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수료하도록 지도·안내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치 아니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위 행위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징계의결 요구사유에 해당하나, 문제의 발단이 사전 위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협회의 직무소홀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점과 동건과 관련한 정부합동감사나 타 시·도의 감사사례에 비추어 금회에 한하여 엄중 주의를 촉구하오니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관련부서 : ○○○과)

[행정상 조치] 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을 신고·관리함에 있어 착공신고시 신고대상 기준 미만이었으나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증축된 건축물 공사에 대해서는 신고·관리 누락 및 미 조치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규정에 따르면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업(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축조로서 신축·증축 및 재축을 포함)을 하고자 하는 자중 당해 공사가 건축법에 의한 착공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착공신고 시에 비산먼지 발생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양구의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실태를 살펴본바, 2005.2.5. ○○동 55-7외 1필지 상에 건축물을 허가함에 있어 건축허가 당시의

연면적은 987㎡이고 착공신고서에도 동일한 면적으로 신고함으로써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누락되어 신고 및 관리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공사 완료 전에 설계변경을 거쳐 2005.9.14. 사용승인 시의 연면적은 1,142㎡로써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2005.7.6. ○○동 567-6 번지 상에 건축물을 허가함에 있어 허가 당시 연면적은 592.9㎡, 착공신고서에는 997.8㎡로 신고함에 따라 역시 비산먼지 발생신고 대상사업에서 누락되어 신고 및 관리가 되지 않다가 2005.11.25. 사용승인 시의 연면적은 1,018㎡로서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위와 같이 건축법에 의한 착공신고 대상사업으로서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기준인 1천 제곱미터 내외의 건축물 축조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신고시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산먼지발생사업 관리대상에서 누락될 우려가 상존해 있으며,

더욱이 사업자가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이를 악용하여 착공신고 시에는 연면적을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신고한 후, 공사 중에 설계변경을 통하여 연면적을 신고기준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방안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건축담당자의 진술에 의하면 극단적인 일례로 착공신고 시에 연면적을 100㎡로 신고한 이후 공사 중에 설계변경을 통하여 10,000㎡로 확대하여도 현행법으로는 이를 규제할 방안이 없다고 함)

[처 분 요 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건축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동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1

[제 목]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행정처분 함에 있어 적발·확인서를 징구한 내용과 행정처분한 사항에 대한 법적용을 상이하게 하는 등 부적정하게 행정처분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호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가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로, 동조 제4호는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의 고장 또는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2호 위반의 경우에는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법 제55조의2), 제4호 위반의 경우에는 경고처분과 함께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계양구에서는 2006.10.25. ○○프라스틱(○○동 738-8, 대표자○○

○)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대기오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 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하기 위한 덕트를 연결하지 아니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도록 방치한 행위를 적발하여, 법 제15조제1항제2호 위반행위로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확인서 상에 배출시설은 분쇄시설로 50마력 1기, 방지시설은 여과집진시설로 분당 처리능력 40m³,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간은 주2회로 1회당 평균 3~4시간을 가동하여 월 평균 30톤을 배출하며, 덕트를 연결하지 아니한 시기는 2006.10.4.일경으로 추정한다고 세부사항을 기재하였는바,

적발당시에 상세히 기록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위반행위는 위 제2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서 상당히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마땅히 고발조치나 자체조사를 통한 검찰송치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담당팀장의 진술에 의하면) 위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환경부(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 전화로 문의하였고, 당해 기관 담당자로부터 위반사항이 경미한 사항이라 판단된다는 답변만을 듣고 위 제4호 규정을 적용하여 “경고” 처분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의 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향후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이나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엄격히 적용, 행정처분 하시기 바라며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들에게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위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로 징계의결 요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사전에 한강환경관리청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여 처리한 점을 고려하여 금회에 한하여 엄중 주의를 촉구하오니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은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6]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3

[제 목] 생활폐기물처리 대행계약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현 황 》

○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 4개소

- (주)○○환경, (주)○○환경, (주)○○환경, (주)○○환경

○ 대행업체별 인력·장비 현황

(2007. 2.현재)

구 분		○○환경	○○환경	○○환경	○○환경
종사자(인)		48	21	21	17
장 비	계	15	10	7	10
	중장비	1	1	-	-
	11톤 트럭	2	3	2	3
	5톤 트럭	9	5	5	6
	2.5톤 트럭	3	1	-	1

○ 대행업체별 쓰레기반입 현황

(단위 : 톤)

구 분		○○환경	○○환경	○○환경	○○환경
계		14,216	4,019	4,270	4,485
소 각		12,101	3,300	2,266	3,767
매 립		2,115	719	2,004	719

○ 대행업체별 관할구역(2006.12말 조정)

비고	○○환경	○○환경	○○환경	○○환경
변경전	- ○○ 1·2동 - ○○ 1동 - ○○ 2동 - ○○동 일부 (○○로 남쪽)	- ○○1동 일부 (○○로 북쪽) - ○○ 2·3동 - ○○ 4동 일부 (○○새길 북쪽)	- ○○ 1동 - ○○ 2동	- ○○·○○동 - ○○ 4동 일부 (○○새길 남쪽)
변경후	- 변경 없음	- ○○1동 일부제외 (○○로 북쪽) - ○○2동 일부추가	- ○○2동 일부제외	- ○○1동 일부추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규정에 따르면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을 허가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247호. 2004.11.18.)」에 따라 대행업체별로 처리능력 및 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대행계약 체결 시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동 제도의 도입취지는 청소업체의 독점체제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와 그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유경쟁 체제의 도입과 업체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여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대행계약 체결 시 이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영업구역 조정이나 단가계약을 유도하기 위함이 목적임

그러나, 계양구에서는 동 제도의 장점을 인정하고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서도 동 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음에도 평가기준이 모호하고, 청소업체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업체별 평가 제도를 이행치 아니하였습니다.

한편 2005. 3월 계양구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업체별 적정 대행료 원가를 산정코자 용역을 발주하여[용역수행 : (사)○○○경영연구소, 용역비 18,315천 원)], 2005. 9월 용역을 준공하였는 바

동 용역 보고서에는 업체별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단가를 ○○환경은

2,908원, ○○환경은 2,565원, ○○환경은 2,366원, ○○환경은 2,717원으로 각각 제시하였음에도, 계양구에서는 2006년 및 2007년 대행계약 체결 시 예산절감 및 업체별 반발 등을 이유로 위 적정 단가나 비율을 무시하고, 기존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체결하였으며,

또한 동 용역보고서에서는 단가산정을 함에 있어 세대당 단가나 톤당 단가 모두 어느 정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최선의 방안으로 “지역전담제에 의한 총액도급제”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음에도, 현행 세대당 단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주요 사항을 모두 배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용역비 18,315천 원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1. 폐기물처리 업체에 대한 평가제도를 조속히 도입·시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생활폐기물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업체별 평가결과(인력·장비·시설, 처리능력, 처리실적, 행정처분 여부, 서비스 수준 등)와 업체별 단가, 대행료 예산의 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시행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대행료 단가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대행료 원가산정 용역보고서, 기존 업체별 단가, 예산확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체별로 적정한 단가를 산출·적용하시기 바랍니다.
3. 동 건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서 폐기물처리 대행계약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행업체별 담당구역이나 계약단가 등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기준설정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 금회에 한하여 엄중 주의를 촉구하오니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위와 같이 관련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국장 및 前·現직 ○○○과장은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7]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도로청소 잔재물(폐토사) 위탁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현 황 》

○ 도로청소 잔재물(폐토사) 처리 업체 : ○○개발(부천시 ○○ 소재)

○ 대행업체(○○개발)의 폐토사 처리 현황

연도별	발생량(톤)	처리금액(천원)	톤당가격(천원)	비 고
2005	1,234	32,769	25.3	수의계약
2006	1,685	52,862	31.3	"

* 2007년도 폐토사 처리예산 : 42,000천원(부족분은 추경예산에 반영예정)

1. 도로청소 잔재물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개입찰을 통하지 않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처리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르면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의 경우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생활계 폐기물)를 득한 업체와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나,

환경부에서는 2004.11.18.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을 제정·시

달하면서 생활폐기물처리 대행계약에 있어서도 공개경쟁과 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행계약 체결시 일반경쟁 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할 것을 시달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양구에서는 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및 2006년 도로청소 잔재물(이하 “폐토사”)을 처리함에 있어서 계양구 관내에 폐토사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적환장 등)을 갖춘 폐기물처리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부천시 ○○에 소재한 특정업체(○○개발)를 지정·수의계약을 통하여 처리하였는바,

2005년 및 2006년 당시 계양구내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10여개에 달하며 적환장(임시 보관장소)을 갖춘 업체도 허가를 내어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위 주장대로 계양구 관내에 적정 처리업체가 없었다고 한다면 당시 적환장을 갖춘 건설폐기물처리업체는 허가를 부당하게 내어준 결과가 됨),

또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개발 역시 최종처리업체가 아닌 수거·운반만을 하는 중간처리업체로서 폐토사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2005년 및 2006년 폐토사 처리예산이 각각 3천만 원과 5천만 원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에 마땅히 공개입찰을 통하여 처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2. 도로청소 잔재물(폐토사)에 대한 처리단가 산정 부적정

아울러 현재까지 환경부나 건설교통부 등에서 “폐토사”에 대한 처리단가를 설정하지 못함으로써 현재 여건상 업체에서 정한 단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마땅히 입찰을 통한 단가계약으로 대행계약을 체결·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었다고 판단되며,

서울시나 부천시 등 타 시·도의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단가 산정용역 발주시에 폐토사 처리단가를 포함하여 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하여 폐

토사 처리단가를 산정, 대행계약을 체결·처리하는 등 합리적으로 폐토사를 처리하여 왔음에도, 계양구에서는 타 시·도의 사례를 파악, 분석하는 등의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3. 도로청소 잔재물(폐토사) 수탁업체 사후관리 부적정

2007년에는 폐토사 처리를 전자입찰을 통하여 ○○환경(인천 ○○소재)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탁업체가 적환장 등 적절한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계약 후 감사일 현재까지 폐토사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폐기물관리법령이나 대행계약서상에 적법처리를 못할 경우 계약해지토록 규정하고 있고, 폐토사는 사업장폐기물로 간주하여 보관기일이 90을 넘을 경우 행정조치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천시 관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나 입찰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기존 폐토사를 처리해 오던 부천시 ○○소재 ○○개발에서도 금년부터는 계양구의 폐토사를 처리할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감사일 현재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계약담당 부서나 처리업체 관리부서에서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한 실사를 한 번도 해보지 아니하였고, 폐기물 관리부서에서는 폐토사를 적정하게 보관하는 지 여부 등을 수시로 지도·점검 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향후 도로청소 잔재물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전자입찰을 통한 단가계약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시기 바라며, 또한 처리단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생활폐기물 처리단가 용역에 포함하여 산출·적용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수탁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되, 처리 지연 등의 계약위반 사항 발생 시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취소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동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지침을 을 준수하지 아니한 행위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사유에 해당하나,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노력하였던 점이 인정되는바 금회에 한하여 엄중 주의를 촉구하오니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8]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1

[제 목] 도로 진공청소차 소모품 등 구매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도로 진공청소차 소모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전자견적에 의한 구매를 하지 않고 특정업체에서 수의구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단서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25조[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구매를 함에 있어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행자부예규 204호, 2006.2.7)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각종 물품을 구입할 경우 구매금액이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수의계약대상자 중에서 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5일)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위 법률 시행이전에는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516(2005.2.3)호와 시 회

제과-1719(2005.2.11)호에 따라 계약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모든 수의계약은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그 내역을 공개하고, 이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수의계약내역 공개방”을 설치하고 공개 시기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공개기간은 계약종료 후 3년까지 공개토록 권고·시달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양구에서는 도로 진공청소차량의 소모품(사이드브러시, 롤러브러시 등)을 구입함에 있어서 동 소모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가 전국의 유일한 업체가 아니며, 정밀기술이 필요한 특정 소모품이 아니고 단순 소모품임에도 2006년도에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7~8회에 걸쳐 총 22,508천원 상당의 소모품을 특정업체[○○서비스(주), 울산 ○○군 소재]에서 견적을 받아 특정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통하여 구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청소용 소모품(대비재료)을 구매함에 있어서 전자견적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업체에서 수의구매

또한 계양구에서는 청소용품(대비재료, 일명 대나무결가지)을 구매함에 있어서 2006.1.23일 3,820천 원, 2006.4.6일 3,750천 원, 2006.5.24일 3,750천 원, 2006.7.19일 3,750천 원, 2006.9.1일 4,125천 원 등 모두 5회에 걸쳐 19,195천 원 상당의 대비재료를 특정업체(○○상사)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하여 구입하였는바,

동 물품은 재질이 대나무로서 도로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하는 단순한 소모품임에도 단지 대량 구입 시 보관창고가 없다는 사유로 기존에 구입하여 오던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수의 구매하는 등 부적정하게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더욱이 위 사례는 대부분의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매년 2000만 원 범위의 예산을 책정하고, 구입할 때에는 건당 구입금액이 500만 원 이하가 되도록 수차례에 나누어 특정업체에서 구매하는 수법으로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향후 노면청소차 소모품(사이드 브러시 등)이나 대나무 곁가지 등의 청소용품
을 구매할 경우에는 전자전적에 의한 단가계약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하여 구
매하시기 바랍니다.

* 귀 부서에서 제출한 의견은 객관·타당성 있는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며, 참고
로 조달청 홈페이지나 기타 입찰정보 검색엔진(비드 OK 등)을 검색한 결과 경
기도 ○○시, ○○시(청소사업소) 및 ○○시(시설관리공단) 등의 경우 노면청소
차 소모품(브러시)을 입찰공고를 통하여 구매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위 행위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위반행위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요구사유에 해당되나, 노면청소차
소모품(사이드 브러시 등)의 특성·품질을 고려하여 구매한 점과 당해 노면청소
차량을 제작한 업체로부터 소모품을 지속 구매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회에 한
하여 엄중 주의를 촉구하오니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시
기 바라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청소용 물품이나 소모품을 구매한
공무원은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전 산통신분야

[일련번호 : 49]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주민등록시스템 사용권한 부여 부적정 및 지도감독 소홀

[위법부당내용]

주민등록사무전산처리규정 제50조 내지 제54조,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지침서 및 주민등록 전산업무 관리철저 지시(인천광역시 자치행정과 -11654,2006.9.5)등에 따라 주민등록시스템의 전산조직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기관의 장은 사용자권한등록부에 해당공무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사용자권한부여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지정하여 주민등록시스템의 권한을 관리하여야 하며, 업무주관 부서에서는 전산조직 및 관할 읍·면·동 단말기의 운영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양구 ○○1동 외 10개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시스템을 운영·관리에 있어서 업무담당자로 지정되지 않은 직원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열람 등의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주민등록담당자 부재시 대리자를 지정하여 부재기간 동안만 업무권한 부여하고 해제사유 발생시 권한을 종료 또는 회수하여야 하나, 최초 대리(위임)권한 부여 후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주민등록시스템을 방만히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동 외 7개 동사무소에서는 전보 등의 사유로 타 부서(기관)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미 부여된 권한을 회수(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주민등록 주관업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관할 동사무소에 대하여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및 단말기 운영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지 아니하는 등 주민등록업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계양구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등록 관련규정(주민등록전산사무처리규정, 지침, 주민등록업무편람 등)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담당자에 한하여 주민등록전산처리업무권한을 부여토록 지도·점검하시고, 산하 동사무소(자치센터)에서는 기관장이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권한을 회수 및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 촉구하고 철저한 직무연찬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0]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1

[제 목]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용역 관리·감독 소홀 및 유지보수비
지출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회계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에 따르면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고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제20조 및 제32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은 기술용역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기술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술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에서는 정보통신장비(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사업을 추진함에 노무비로 유지보수 용역단가를 산정하면서 월간 정기점검을 2회 실시하고, 분기점검을 실시토록 설계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였으며, (주)○○○커뮤니케이션(2005년) 및 ○○○넷(2006년)과 계약이 체결되어 유지보수 용역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지보수 용역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당초 유지보수 금액산정시 설계된 내역이며 정보통신장비(네트워크) 유지보수 계약서의 제5조(용역내용) 및 제6조(특기사항)에 서술된 용역 내용인 “계약기간 중 월 2회 시스템의 경정비

와 청결상태 유지”를 위하여 정기점검을 매월 2회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나, 유지보수 계약업체[(주)○○○커뮤니케이션, ○○○넷]에서는 매월 1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유지 보수료를 청구하였는바,

이는, 유지보수계약 체결사항과 당초 설계된 월별 유지보수료(2주× 363,000원=726,000원)에 대한 계약을 일부 수행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1회 점검분에 대한 예산을 지출하면서 관련자료 등을 검토치 않고 지출하는 등 기술용역의 적정한 수행을 소홀히 관리·감독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계약구 ○○○과에서는 정보통신장비(네트워크)를 유지보수함에 있어 당초설계기준 및 계약서류에 따라 유지보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2.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 촉구하고 철저히 직무연찬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바코드시스템 구축 및 자료관 유지보수 관련

[위법부당내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3항 및 회계예규 제20조(검사), 21조(인수)와 회계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등에 의거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고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사업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또한,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예산편성지침 및 소프트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에서는 바코드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약서(과업지시서 등)상의 성과품인 바코드시스템 운영프로그램과 구 기록물 입력프로그램의 통합기능구현(연계 등), 메뉴(프로그램)구현내역 및 처리성능의 적합성 여부를 시험운영하고 검수를 하여야 하나, 물품구매 검수내역만으로 완공검사를 하였으며,

2004년 구축 완료된 자료관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사업을 함에 있어, 당초 구축금액(H/W, S/W포함)인 288,797천 원을 적용하여야 하나 설계단가인 312,199천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2007년 유지보수 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자료관시스템의 프로그램추가 등의 변동요인 없이 유지보수요율을 9.5%(2005-2006년)에서 12%(2007년)로 상향조정하여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1. 향후, 정보화시스템(자료관시스템 등) 구축 및 추가 개발시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및 회계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추진하시고, 구축 완료후 검사시 회계예규 제20조(검사), 제21조(인수)에 따라 정보화 용역사업 계획서 및 제안서와 과업지시서를 기준으로 사업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유지보수 계약과 관련하여 소프트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 촉구하고 철저한 직무연찬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1명)

[제 목] 개인용 컴퓨터 보안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관한법률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등) 및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25조(개인용컴퓨터 보안관리), 제29조(단말기 보호)에 의거 개인용컴퓨터를 전산망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인가자가 단말기를 무단으로 조작하여 자료를 열람, 출력, 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비밀번호 부여 등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양구 ○○○과에 근무하는 ○○○는 개인정보자료(복지대상자선정 및 급여신청자료, 상담대장 등)를 개인PC에 무단방치 하였고, ○○○과 ○○○ 외 2명은 개인PC에 행정자료 등을 무단방치 하였으며, ○○○과 ○○○ 외 2명은 본인이 관리하는 공통PC 및 공공근로자(상용직 등)의 개인PC에 행정정보자료 등 불임자료와 같이 비인가자가 단말기를 무단으로 조작하여 자료를 열람, 출력, 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비밀번호 부여 등 보호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정보통신부 고시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의거 단말기(개인용컴퓨터) 취급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개인용컴퓨터에 대하여 비인가자가 단말기를 무단으로 조작하여 전산자료를 열람, 출력, 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비밀번호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하고, 10분 이상 단말기의 작업중단시 화면보호조치를 설정하기 바라며, 부득이 자료(파일, 디렉토리) 공유시 비밀번호 부여조치를 하여 추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분야

[일련번호 : 5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 목] 주기적신고 미이행업체 행정처분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주기적신고 미이행 업체 : 붙임

2.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면 일반 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 마다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주기적 신고”)를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3조에 의하여 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에서는 위 법령에 따라 관내 건설업자가 정해진 기간에 주기적 신고를 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적정한 행정행위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건설(계양구 ○○동 소재) 외 55개 업체가 길게는 7년3개월 짧게는 2개월이 경과하도록 주기적 신고를 행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가

감사일 현재에서야 “전문건설업 등록사항(주기적) 추진 계획(건설과-1867, 2007.2.2)”을 수립하여 신고기간을 2007.3.30일까지로 하는 시정명령(건설과-2024, 2007.2.6)을 시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에서는 관내 건설업자가 주기적 신고를 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및 등록말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고, 감사일 현재 미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귀 부서에서 수립한 “전문건설업 등록사항(주기적) 추진 계획”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주기적 신고 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주기적신고 부적정처리 업체 현황

업 체 명	업 종	자격기준(인력)	갱신일	비 고
□□엔지니어링	난방시공업체1종	해당분야 2명	2007. 1.15	

2.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 마다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주기적 신고”)를 건설업종별로 신고하여야 하고,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를 접수한 건설업 등록관청은 건설업자가 신고한 건설업종의 등록기준이 3년 동안 적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건설업 관리지침)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인력의 보유(재직)에 관해서는 건설기술 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세원천징수영수

증 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사실 등을 상호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3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다.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에서는 ○○엔지니어링(계양구 ○○동 소재)의 주기적 신고를 처리함에 있어 같은 법 제9조 및 “건설업 관리지침”의 규정과 같이 건설업자가 신고한 건설업종의 등록기준이 3년 동안 적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하여야 하고, 해당 기술인력의 재직여부는 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사실 등을 상호 대조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의 재직확인이 없이 단순히 근로계약서만으로 재직여부의 확인을 인정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에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를 처리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의 적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준 미달업체가 신고처리 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분야

[일련번호 : 5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유통관련업자 지도단속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유통관련업(노래연습장) 행정처분 현황 : 붙임

2. 내 용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및 비디오물감상실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행위, 율락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3에 의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영업정지 1월부터 영업폐쇄 등록취소까지 행정처분 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에서는 이와 같이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유통관련업자의 건전영업 계도 및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키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함에도,

2005년도에 “2005 하반기 유통관련업 지도단속계획(○○○-14357, 2005.

8.9)”, “2005 11월 유통관련업 집중단속계획(○○○-20186, 2005.10.26)”, “2005 12월 노래연습장업 집중단속 계획(○○○-24055, 2005.12.12)” 등을 수립하였으나 현지 지도단속은 2005.12.26~28일까지 3일 동안 노래연습장 80개업소에 대하여

2006년도에도 “2006 유통관련업 지도단속 계획(○○○-652, 2006.1.9)”, “2006 12월 유통관련업 지도단속 계획(○○○-12573(2006.12.1)” 등을 수립하였으나 현지 지도단속은 2006.5.3에 노래연습장 10개 업소, 2006.6.26일에 노래연습장 7개 업소, 2006.12.14에 게임제공업 및 비디오물감상실업 17개 업소에 대하여 유통관련 업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지도단속의 의지가 없다고 할 것이며

노래연습장에 대한 단속결과를 보면 감사대상기간(05.2~07.1) 동안의 행정처분 처분건수 200건 중 경찰통보 198건, 자체적발 2건으로 행정처분 실적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단속내용에 있어서도 자체 단속시 주류보관 1건, 시설기준위반 1건을 적발하였으나 경찰통보 내용에서 접대부 알선 77건, 주류보관(판매, 묵인) 86건 등 단순 확인으로 단속이 어려운 사항이 있으나, 청소년실 표지판 미부착 14건, 등록증 미게시 29건 등 단순 육안 확인만으로도 등록기준에 위배되는 업소가 다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발사항이 1건도 없는 등 유통관련업자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을 소홀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에서는 관내 유통관련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시어 건전영업제도 및 불법행위의 사전차단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6]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유통관련업자 교육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유통관련업자 교육 실시 현황

구 분	본교육	1차보충	2차보충	비고(교육대상)
2005	12.14			게임장업자
2006	11. 2	12. 5	07.2.6	노래연습장업자 게임제공업자

○ 2006.10.26일 이후 등록된 노래연습장업 현황

등록일자	업소명	소 재 지	비 고
2006.12.1	○○○	계양구 ○○동 302-12 2층	
2006.12.5	○○○	계양구 ○○동 4-11 지하층	

2. 내 용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법률제7428)』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유통관련업자에게 유통관련업자 교육을 연 3시간 범위안에서 실시

하고 유통관련업자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6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2006.4.28)』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되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에서는 2005년도에 “유통관련업자 정기교육 실시계획(○○○-23303, 2005.12.5)”을 수립하여 관내 유통관련 업소에 대하여 정기교육을 실시하되 이중 노래연습장업·비디오물감상실업자 대하여는 교육교재로 대체하고 일반게임장업자에 대하여는 기준고시 변경 등의 사유로 2005.12.14일 15:00에 구청대강당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수립하였으나

교육실시에 대한 결과보고가 없어 교육참석 현황 및 교육불참자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의 적정성(당해교육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은 없음.)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게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으며

2006년도에도 “유통관련업자 정기교육 실시계획(○○○-9130, 2006.10.19)”을 수립하여 노래연습장업·게임제공업자에 대하여 법률 제정 등을 사유로 집합교육을 실시(2006.11.2)한다는 방침을 수립 후 교육 불참자 발생에 따른 보충교육을 2차에 걸쳐 실시(2006.12.5, 2007.2.6)하면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2006.4.28)』 제정 이후에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위 (보충)교육에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등록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유통관련업자 교육에 대한 관리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에서는 유통관련 업자에 대한 교육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건전영업계도 힘쓰는 한편, 교육 실시에 대한 결과를 명확히 하여 교육 불참자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분야

[일련번호 : 57]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불법광고물 정비추진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불법광고물 조치현황

구 분	정비대상	자율정비	존치	비고
계	1,438	977	488	
2005년	561	584	0	자진정비 39
2006년	877	393	488	

2. 내 용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0조에서 구청장은 같은 법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위배되게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고, 이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0조의2에 처분권자는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 등에 대하여는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고, 이때 처분권자는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당해 관리자 등에게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에서는 2006년도에 “2006년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계획(○○○-15922006.1.24)”에서 ○○로외 3개로선 2.6km구간에 대하여 불법 고정광고물 주요정비구간으로 지정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면서 우선 건물주 및 광고업주에게 정비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자율정비를 유도하되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강제정비 실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물량조사를 실시 결과 정비구역을 ○○로와 ○○길로 변경하는 “2006년 옥외광고물정비 추진계획 일부변경(○○○-2765, 2006.2.22)”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불가마외 1,145업소 2,588개의 고정광고물에 대하여 허가 398, 양성화 1,193, 정비(철거) 877, 기타 120건으로 정비물량을 확정하면서 2차에 걸쳐 계고장을 발송(06.2월, 06.4월)한 후 06.6월에 영장을 교부하여 06.7.30까지 행정대집행을 완료하겠다는 내부방침 “불법고정광고물 양성화 및 계고장 송달(○○○-2789, 2005.2.22)”을 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비내역을 보면 정비대상 877건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우선하여 자율정비를 유도하여 393건에 대하여 73,950천 원의 자율정비비를 지급하여 자율정비를 실시 한 후 이에 불응하여 존치되고 있는 488건의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적절한 행정조치를 감사일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는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을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 후 존치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제거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8]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옥외고정광고물 허가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광고물 심의 미 실시 현황
- 광고물설치 불가지역의 광고물 허가처리 현황
- 건축사 미설계 옥상간판 허가처리 현황

2. 내 용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심의 미 실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에서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0조에 따라 일정 기준이상의 광고물을 허가할 때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2005 및 2006년도에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면서 “○○○닭갈비”외 56건의 광고물은 전광류를 사용한 표시면적 10㎡ 이상의 광고물로 이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광고물임에도 불구하고 불법고정광고물의 양성화라는 사유로, “(주)○○참치”외 9건의 광고물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신규광고물임에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허가처리 하였으며,

《광고물설치 불가지역에 광고물 허가처리 부적정》

옥상간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그 설치지역을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형외과의원”외 1건의 옥상간판은 설치장소가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그 설치허가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위 건과 동일하게 양성화라는 사유로 부당하게 허가 처리하였고, 지주간판 허가 시에도 동일하게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따라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지 외의 지역에서는 네온 등의 조명을 사용하는 지주이용간판은 허가를 할 수 없음에도 “○○여관”외 1건의 지주이용간판도 설치장소가 준주거지역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네온 등의 조명을 사용하면 그 설치허가가 불가함에도 위 옥상간판과 동일하게 양성화라는 사유로 허가처리 하였고,

《옥상간판 허가처리 부적정》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높이 180cm이상 옥상간판의 설계는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가 설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텔”외 2건의 옥상간판이 이러한 전문가의 설계도서 없었음에도 위 건과 동일하게 양성화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허가처리 하는 등 옥외고정광고물의 허가처리에 대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에서는 옥외고정광고물을 허가처리 할 때에는 신규 및 양성화를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허가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적정하게 허가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9]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1개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도로공사 실시계획인가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사전재해영향성 및 환경성 검토 현황

2. 위법부당내용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하면 동법 제5조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 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6조 별표 제1항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에 의거 도로사업의 경우 실시계획 인가 전 사전재해영향성을 검토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양구에서 시행중이거나 공사가 완료된 불임 공사의 경우 동검토가 수행되지 않았음에도 실시계획인가 조치하는 등 부적절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추후 시행되는 도로공사 등 도시계획 사업에 대하여는 실시계획 인가전 반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확행한 후 인가토록 하고
2.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설분야

[일련번호 : 60]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회수 3,103 천원

[신분상 조치] 훈계1

[제 목] 관내 맨홀보수공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관내맨홀 보수공사

관내일원 맨홀보수공사 외 1건

2. 위법부당내용

《맨홀인상 보수공법 선정 부적정》

도로 지중에 설치되는 지하매설물은 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맨홀 설치가 필요하며 그 종류는 상수도 맨홀, 하수도 맨홀, 통신맨홀, 한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맨홀은 도로의 유지관리(덧씌우기) 및 차량통행 등에 의하여 인상(포장면에 맞추기 위해 들어올림) 및 파손보수가 필요하게 되며 이와 같은 맨홀인상 및 보수공법은 크게 4가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 4가지 공법중 □□공법, △△공법, ▽▽공법은 맨홀인상 및 보수공사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다만 맨홀상부 인상에 적용(포장 덧씌우기 구간) 부분은 ▷▷ 공법이 적정합니다.

그동안 계양구에서 시행하는 맨홀보수 적용 공법을 살펴보면 입찰시 □

□공법, △△공법, ▽▽공법으로 제한하여 시공 하였으나, 그러나 현장 확인결과 동 공법이 적용된 현장 중 기존 포장면이 노후되어 아스콘포장 덧씌우기를 시행한 부분은 위 공법 보다는 ▷▷공법 적용시 포장과 동시에 시공이 가능하고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발생치 않는바, 이와 같이 맨홀 보수공사시 각 보수공법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각의 현장 여건에 맞게 적용하여 시행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음에도 그 공법 선정이 현장 여건에 적합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맨홀인상 공사 정산준공 부적정》

계양구 ○○○과에서 2006년 시행된 『관내 도로 덧씌우기 구간 맨홀인상 공사』의 경우 감사시 현장 확인결과 맨홀 28개소에서 설계시 50mm 인상하는 것으로 설계 되었으나 0~40mm로 변경 시공 되었음에도 준공시 현장조사를 철저히 시행하지 않아 이를 정산치 아니하고 준공 처리 하였으며, 『관내일원 맨홀보수공사』의 경우에도 16개소의 맨홀에서 설계보다 적은량이 시공되었으나 이를 정산준공 처리하지 않아 2건 합계 3,103천 원 상당을 과다하게 지출 하는 등 맨홀인상 공사와 관련한 감독 및 준공처리가 부적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추후 시행되는 맨홀인상 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여건 및 관련공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용 공법을 선정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시행이 되도록 하시기 바람
2. 과다하게 지급된 3,103천 원 상당에 대하여는 관련자와 협의하여 회수 조치 등 공사결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에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85,861천 원

[신분상 조치]

[제 목] 맨홀인상 보수공사 보수비용 징수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관련공문 사본

2. 위법부당내용

도로내 설치된 각종 맨홀의 구체 및 뚜껑의 유지관리 책임은 맨홀 관리 기관에 있으나 계양구는 상수도맨홀, 통신맨홀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에서 우선 보수 조치하고 그 비용을 청구토록 협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양구에서는 2005년 시행된 『관내일원 불량맨홀 보수공사』에 소요된 상수도 맨홀 보수비 9,568천 원 상당을 '05.06.21 관할 계양수도사업소에 청구이후 미납부 되었음에도 납부촉구 등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며, 2006년 4월과 6월에 시행된 『관내일원 도로 재포장구간 맨홀인상공사』 및 『관내일원 도로재포장구간 맨홀인상공사』 시 발생한 비용 76,293천 원 상당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납부촉구를 하지 않아 3건 합계 85,861천 원 상당이 감사 현재까지 미수납 되는 등 효율적인 납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유관기관 납부대상 맨홀에 대하여는 공사 및 부과시 납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지속적인 납부 독촉 및 관리(인수인계)를 실시하고
2.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용역현황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설계등 용역의 용역현황관리기관 통보 현황

2. 위법부당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4항에 의하면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의 계약(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이 체결되거나 당해 설계 등 용역이 준공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계약변경일을 포함한다) 및 준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하여 용역현황 관리 기관에 통보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양구에서 시행한 불임 용역의 경우 용역계약 체결사항 및 준공사항을 용역 수행시 관련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등 용역현황 관리가 부적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추후 시행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는 계약 체결 되거나 용역이 준공될시 반드시 관리 기관에 통보 하는 등 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2.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에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회수 60천원, 가스탐지기 1기

[신분상 조치]

[제 목] 제경비 정산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1동254-6번지(○○연립)일원 ○○외4개소 도로재포장 외 1건 공사

2. 위법부당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하여 계상토록 되어있고 동 비용은 준공시 사용실적에 의거 정산토록 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및 32조의5에 의거 총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5-32호)에 의거 적정 사용 여부를 감독하고 준공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위 건관련 『○○1동254-6번지(○○연립)일원 ○○길외4 개소 도로재포장

공사』의 경우 계상된 환경보전비를 규정된 항목 비용으로 사용치 않고 장화 구입비용(60,000원)으로 보고되었음에도 이를 정산치 않고 준공처리 하였으며,

『○○택지일원의 5개소 하수도 준설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05.10.10 ~ '05.11.19까지 1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음에도 계상된 안전관리비에서 구입한 가스탐지기(44만원 상당 : 감사기간 중 회수 완료)을 준공시 회수하지 않는 등 공사 준공과 관련한 제경비 정산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1. 과다하게 지급된 60천 원 상당 및 가스탐지기 1기에 대하여는 관련자와 협의하여 회수 조치하고
2.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에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1

[제 목] 지급자재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공사명 : ○○동 780-3번지의 공영주차장 시설공사
- 지급자재 내역 : 레미콘 332m³, 아스콘 557톤

2. 위법부당내용

인천광역시건설공사감독자의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감독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소속기관장의 지시사항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시의적절하게 확인·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시공·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감독을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시 지급자재수불부를 비치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적정하게 보관·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내역을 보고받아 지급자재 수불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 공사의 경우 지급자재수불부를 미비치 하는 등 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추후 시행되는 모든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자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2.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에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107,441천 원

[신분상 조치]

[제 목] 하수도 사용료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 계양구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

2. 위법부당내용

《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대하여》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2003.10.27) 제13조에 의거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요율을 적용 징수하게 되어있고, 그 부과는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와 징수에 있어 지방세법 및 급수조례를 준용토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조례 21조(독촉장) 및 지방세법 제28조의2(체납처분) 규정에 의거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처분 등 사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계양구 관할 하수도 사용가에 대한 체납상태를 확인하면, 그동안 체납자에 대한 체납독촉 및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2~2005년 까지 체납건수 6,070건에 107,441천 원 상당이 체납되어 있음에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 등을 취하지 않는 등 체납액 관리가 소홀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하수 사용가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지하수 사용가에 대하여는 상기 조례에 의거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부과 대상을 상시 관리 하여야 하나 관할 계양수도사업소에서 부과되는 지하수 사용가는 500건 임에도 자체관리하는 지하수대장 부과대상 세대는 531건으로 31건이 누락 징구되고 있는바, 이에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과대상을 정확히 확정하여 부과관리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하수도사용료 고액 체납자에 대한 납부 관리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현재 추진중인 지하수사용현황 조사와 병행하여 지하수사용가에 대한 부과대상을 명확히 확정 정리하시기 바라며,
2.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에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6]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1

[제 목] 하수처리구역 변경공고 미 실시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관련공문 사본
-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사용검사 현황

2. 위법부당내용

하수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하수처리구역)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 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하며, 동법 제65조에 의거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계양구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인 장기, 굴현 토지구획정리지구 및 박촌동, 방축동 지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본부에서는 '04.11.29부터 동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E라인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차집 개시를 ○○○과로 통보 하였으나, ○○○과에서 변경공고를 실시하지 않아 붙임 공동주택 2,494세대 등 동지역에 위치한 상수도 및 하수도사용가에 '04.11.29부터 현재까지 하수도사용료가 미부과 되고 있는 등 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1. 즉시 인천시 전체에 대한 하수처리구역 지정 현황을 파악하여 변경 공고를 실시하고,
2.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에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7]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도로개설공사 구간 내 손실보상 물건(담장)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공사감독 담당공무원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현장설명서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서가 현장조건과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사 수행 하여야 하며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12 2004.04.06)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양구에서는 위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업구간 내 편입된 지장물(담장 L= 70.9m)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2004.12. 3 보상계획 공고하여 2005. 4.12 소유자 ○○○, 2005. 8. 4 소유자 ○○○, 2005. 7.13 소유자 ○○○, 2006.10.23 ○○○에게 각각 담장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철거된 담장으로 인한 필요한 조치사항은 손실보상을 받은 자가 행위를 하는 것이 적법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양구에서는 철거된 보상가옥 건물주의 영세한 점과 부분철거로 인한 건물 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차원에서 민원인이 담장설치를 요구하면서 공사방해를 하자 준공기한 내 공사완료 및 공사진행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2006.12.18 기 보상된 담장을 시멘트블럭(L= 120m)으로 재설치하는 등 도로개설공사구간 내 손실보상 지장물(담장)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8]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1

[제 목] 건설폐기물처리 운반비 조정에 대한 설계변경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품셈이나 일위대가, 단가산출서는 발주자의 예정가격작성 또는 입찰자의 입찰금액결정시 기초 자료로 적용되는 등 공사비 적산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참고자료로서 발주자 또는 입찰자의 금액결정에 참고 되는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품셈 또는 일위대가, 단가산출서는 계약문서나 설계서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체결 후에 이들이 변경되더라도 설계변경의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품셈, 일위대가, 단가 산출서를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양구에서는 2006. 7. 4 인천광역시 중구 ○○동 3가 ○○-○○번지에 있는 주식회사 ○○환경(대표이사 ○○○)업체와 계약(용역도급 : 31,252천 원)을 하여 같은 해 9.12 준공처리 한 ○○동~○○동간 중앙농로 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을 추진하면서 2006. 7.31 도급사인 (주)○○환경에서 운반비 계약단가가 낮아 운반업체의 손실이 우려되므로 운반비 단가조정을 요구하자 다음 날인 2006. 8. 1 당초 설계용역사인 (주)○○○엔지니어링에게 검토 지시하여 2006. 8. 4 조정된 단가산출서를 통보받아 2006. 9. 7 설계변경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급자가 계약금액조정 등을 요구하면 그 내용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우선 관련법령 규정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계약구에서는 도급자의 요구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검토절차도 없이 바로 설계용역사로 하여금 변경단가산출 근거 등을 작성하게 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단가산출서등의 조정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문서나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함으로 변경하여 계약금액 조정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나 ○○동~○○동간 중앙농로 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의 설계설명서 9)정산설계 나. 항에서 폐기물처리운반은 실 거리정산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운반거리 $L = 8.86\text{km}$ 에서 $L = 4\text{km}$ 가 연장된 $L = 12.86\text{km}$ 로 조정한 사실은 정당하다고는 볼 수 있으나 조정해서는 안되는 단가산출서의 산출계수 값인 덤프운반계수 (t_1 : 대기시간)까지 조정하는 등 부적정하게 설계 변경되도록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9]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회수2,560 천 원

[신분상 조치]

[제 목] 견적1식 단가에 대한 설계변경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대상 요건이 발생되었을 시에는 발주처는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기존비목)와 신규비목 단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협의단가, 기술개발보상적용, 일부공종의 1식 단가 등 설계변경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2항의⑥ 규정에서는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실례가격이 없거나 감정가격, 원가계산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견적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적 1식 단가로 설계변경 할 시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증감되는 물량 및 단가는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 등을 참고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견적구성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는 계약상 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단가에 의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계약단가 또는 설계변경당시의 단가에 낙찰율이 적용된 단가를 적용하여

야 합니다.

그런데도 계양구에서는 주민 친수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한 물레방아수로 (8,000천 원), 일체식문비(13,090천 원), 발전기(15,500천 원), 음수대(13,200천 원), 부유물 걸림장치(1,200천 원)등의 공중에 대하여 각각의 견적 1식 단가를 적용하여 2006. 5. 2 설계 변경하면서 견적단가가 세부품목 구분이 없으면 발주기관에서 단가산출기준을 정하여 설계 변경을 하여야 함에도 설계변경당시 제출된 견적단가를 그대로 부가가치세만 적용하여 설계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된 견적가는 재·노·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품목구분은 없으나 견적제품의 특성상 외부에서 완성제품을 가공하여 현장에 설치하는 “외주가공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견적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하고 경비항목으로 분류하여 설계변경 원가계산을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견적 1식 단가에 대한 설계변경을 부적정하게 하여 약2,560천 원이 과다 설계되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560천 원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0]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외 2개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보험료(국민건강, 연금보험)가입확인절차 소홀

[위법부당내용]

건설공사의 원가계상작성준칙에 의거 작성되는 건설공사의 원가계상 시 반영되는 국민건강보험 및 연금보험은 2003. 8월부터 실시되는 신설보험으로서 총 공사금액과 관계 없이 2005. 1월부터 1인 이상 30일 이상 사업기간의 건설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일용인부포함)를 상대로 계약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 보험은 수급자의 소속직원을 상대로 한 보험이 아니고 일일근로자의 최소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입보험이므로 발주청은 수급자가 상기보험이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계양구에서는 기성 및 준공검사 시 수급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영수증은 당해사업장의 일일근로자에 대한 보험납입영수 사실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사 및 소속 대표이사의 명의로 한 보험영수증만을 제출하고 있는데도 당해공사의 목적으로 납입된 사실로 인정하고 기성 및 준공검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가입여부는 회사 명의로 납입된 보험영수증만으로는 확인이 불가하므로 근로자의 보험가입명부를 확인하고 보험관리공단의 확인절차를 통해서 준공 등을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임 2005,2006년도 건설공사에 대해서 보험가입 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보험납입영수증까지도 또한 누락된 사실이 있는데도 그대로 인정하고 준공처리하는 등 보험가입확인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배치 관련 검토 소홀

[위법부당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①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중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법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계양구청에서 2005년부터 추진 준공한 “○○동 ○○로 정비공사”외 다수의 사업을 보면 학·경력자일 경우에는 소정의 학과를 졸업하고 해당분야 및 유사경력분야에서 3년 이상의 현장실무경험이 있어야 하며, 경력자의 경우에는 5년 이상(전력기술관리법 7년)의 현장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는데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면서 기술인협회 발급 세부 일정별 경력기간 증빙서류가 누락되어 해당분야 경력 및 유사경력사항 등을 파악할 수가 없는 데도 현장대리인으로 인정하는 등 관계법령 기준과 다르게 현장대리인으로 승인하여 주는 등 건설기술자 배치관련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분야

[일련번호 : 7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위반건축물 관리소홀 및 이행강제금 미부과

[위법부당내용]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 등에 위반하게 된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69조의2(이행강제금)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후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시

정명령을 하고, 그 기한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건축법』 제6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6항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양구 ○○○과에서는 붙임 현황과 같이 2005.1.1.부터 신규로 적발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2동 444-1번지상 건축물(건축주 ○○○) 등 7건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도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20,344천 원 상당을 2006년부터 반복부과 하지 않는 등 위반건축물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이행강제금 부과·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위반건축물이 시정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1

[제 목] 건축허가 처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위 치	허가일자	건축주	용 도	지적사항	비 고
○○동 507-13 외 2필지	2005.07.18	○○○	근린생활시설	- 전면공지 미조치 - 허가조건 부적정	
○○동 504-2	2006.05.09	○○○	근린생활시설	“	사용승인 (2006.09.01)
○○동 636-6	2006.10.02	○○○	단 독 주 택	“	사용승인 (2007.01.11)
○○동 490-4	2006.05.29	○○○	근린생활시설	- 지붕경사 부적정 - 허가조건 부적정	사용승인 (2006.05.29)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건축허가 등의 신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등)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도시관리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05-227호, ○○구역 지구단위계획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2-195호)에 의하면 건축선 후퇴로 생기는 전면공지(1~2미터)에는 보행통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수·벤치 등의 휴게시설과 조명·장식시설 등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으며, 포장은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 장식포장을 유도하고, 인접한 보도 및 보행자 전용공간과 유사한 높이 및 재질을 유지하여 고저차 없이 연결 하도록 되어 있고,

담장의 설치는 공공보행통보·공원에 면한 담장은 1미터 이하의 생울타리 담장을 설치하고 그 밖의 부분에서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2미터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담장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박공지붕, 모임지붕등)을 설치하되 경사지붕 설치시의 구배는 3/10 ~ 7/10이 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양구 ○○○과에서는 ○○동 504-2번지(건축주 ○○○) 등 3건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처리하면서 전면공지 대하여 설계도면 및 허가조건 등에 아무런 조치 없이 허가처리 하였으며, ○○동 490-4번지(건축주 ○○○)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경사지붕 구배를 건축허가시는 1/20로, 사용승인시는 1.7/10로 지구단위계획과 상이하게 허가 및 사용승인처리 하였으며,

2005년부터 2006년까지 ○○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건축허가 15건을 처리하면서 허가조건에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상충되게 담장의 높이는 2미터 이하로 설치하라는 조건을 부여하는 등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굴현구역 지구단위계획과 상이하게 지붕경사 구배를 설계한 건축사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사위법보고 등 행정처분토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건축선 후퇴로 생기는 전면공지 부분 및 담장설치 허가조건은 건축주에게 지시하여 지구단위계획과 적합하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이와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민원서류 처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위 치	사업주체	사업승인	용 도	규 모	지 적 사 항	비 고
○○동 25블록 8롯트 외 13필지	○○토건 (주)	2005.07.14	공동주택 (아파트)	지하 1층 지상15층 6개동 466세대	- 담장설치 지구단위계획과 상이하게 승인 - 민원서류 보완조치 부적정	골조공사 완 료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단독주택 20호 및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등)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인천도시관리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인천광역시 고시 제2002-195호)에 의하면 담장의 설치는 블록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은 1.2미터 이하의 투시형이나 생울타리 담장으로 설치하고, 동일 블록내 담장은 유사한 색상과 재료사용 및 통일화 된 형태로 블록별 일체감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서류의 보완 등)의 규정에 의거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기간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 이내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6조(민원서류의 반려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양구 ○○○과에서는 ○○동 25블럭8롯트 외 13필지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류를 처리하면서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상이하게 인접대지 경계선에 1.5미터의 담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승인처리 하였으며, 민원서류의 보완 및 반려 등의 조치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민원서류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구역 지구단위계획과 상이하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된 담장은 현재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통하여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이와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감액 3,750천 원

[신분상 조치]

[제 목] ○○○회관 증축공사 설계용역 감독 소홀

[위법부당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건설공사의 환경관리)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환경훼손 및 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환경관리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하여야 하며,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은 별표 1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공사비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내역서에 직접공사비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환경관리비산출기준 제1호의 다목에 규정된 42개 시설의 환경보전비 항목이 일부라도 반영된 경우에는 요율로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양구 ○○○과에서는 2006.10.23. ○○건설주식회사(대표 ○○○)와 계약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회관 증축공사』 설계용역 감독을 실시하면서 환경보전비 항목으로 공사종류별로 정해진 요율 0.5%(5,045천 원)를 적용하여 주고도, 환경보전비로 집행가능 한 조립식가설울타리 및 이동식화장실을 직접공사비로 중복계상(3,750천 원) 함으로써 공사비 약 3,750천 원 상당 예산을 과다하게 설계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환경보전비로 집행가능 한 조립식가설울타리 및 이동식화장실 설치비용 약 3,750천 원 상당에 대하여는 중복계상 되지 않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감액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앞으로는 이와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6]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6,100천 원

[신분상 조치]

[제 목] ○○○청사 정밀점검 용역시행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3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적제출 등) 제2항의 규정에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현황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거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양구 ○○○과에서는 2006.12.05. 『○○○청사 하자진단 용역』을 13,195천 원에 계약하여 2007.01.19.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점검진단 결과를 2007. 02. 07.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 및 승인하여 2007년도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없는데도 2007년도 본예산에 『○○○청사 정밀점검 용역』시행을 위한 6,100천 원의 예산을 중복하여 편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청사 정밀점검 용역 시행을 위하여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6,100천 원의 예산에 대하여는 감액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7]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공공건물 설계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계반영 소홀

[위법부당내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3조(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의 보급촉진)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수급의 안정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에너지기술개발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정부투자기관이 출자한 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에너지사용기자재·에너지공급설비 또는 그 부대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 (국무총리지시 2004-1호)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29호) 제4조(고효율기자재의 의무사용 등)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공공건물 신축(증·개축 포함) 또는 기기교체 등으로 신규 및 교체 수요 발생시에 의무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적용 대상기관의 장은 우선 구매 등을 통하여 고효율기자재를 사용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양구 ○○○과에서는 ○○도서관 건립공사 외 5개의 공공건물 신축공사 설계용역 감독을 실시하면서 형광램프 및 안정기 등 일부 품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반영하였으나 붙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미적용 현황』 과 같이 변압기 · 배수펌프 · 전기순간 온수기 등에 대하여는 설계에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앞으로는 공공건물 설계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가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8]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회수 1,469천 원

[신분상 조치] 훈계1

[제 목]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건설공사의 환경관리)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환경훼손 및 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환경관리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하여야 하며,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은 별표 1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공사비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내역서에 직접공사비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의 다목에 규정된 42개 시설의 환경보전비 항목이 일부라도 반영된 경

우에는 요율로 중복하여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양구 ○○○과에서는 2005.07.22. ○○건설(주) 대표 ○○○와 계약하여 2006.05.31. 준공한 『○○○부지 공영주차장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을 2005.12.07. 실시하면서 설계내역서에 환경보전비(직접공사비×0.2%)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방음벽 및 이동식 세륜기 설치는 환경보전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이를 중복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부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공사비 약 1,469천 원 상당의 예산을 과다지급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설계변경시 중복계상 된 환경보전비 1,469천 원 상당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하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와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9]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보조업무 및 사후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등)제6항 및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보조)의 규정에 의거 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은 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려는 자에게 설치 또는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2조의2(보조의 대상) 규정에 의거 단독 및 공동주택의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및 공동주택의 부지내에 추가로 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법 제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사후관리)제1항의 규정에는 보조금의 지원으로 설치된 주차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은 분기 1회 현지출장하고 내집 주차장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실사하여야 하며, 제2항에는 실사결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주차장을 폐쇄한 경우 지체 없이 조례 제22조의4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실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양구 ○○○과에서는 불임 현황과 같이 ○○2동 931-74번지(설치자 ○○○) 등 2건의 경우 『건축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대지안의 조경부분을 없애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인데도 3,249천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으며, 2005년부터 보조금의 지원으로 설치된 11건의 경우 분기별로 1회 이상 현지출장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보조업무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 지원시 관계법령 및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보조금을 지원하시기 바라며, 보조금 지원 주차장에 대하여는 타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지적분야

[일련번호 : 80]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개별공시지가 업무 소홀

[위법부당내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Ⅱ-2-나 규정에 의하면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
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부록Ⅱ’의 일단지 범위인 건축중에 있는 토지와 공시기준일 현재 나지상태이
나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사를 착수한 때에는 그 일단지의 토지를 1필지로 보
고 토지특성 조사를 하며,

일단지로 조사된 필지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공시지가관리), 일단지현황 관
리에서 작성, 등록하여 관리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양구 ○○○과에서는 ‘06.01.01기준으로 ‘06.05.31 지가결정·공시한 개별공
시지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산정시 일단지로 조사,산정은 하였으나 개별공
시지가 관리시스템에 일단지에 대한 일부관련지번 미기재로 인하여 일단지현
황이 일부 관리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하여 일단지로 조사된 필지는 한국토지정
보시스템(공시지가관리), 일단지현황 관리에서 작성, 등록하여 관리 하도록 업
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대한○○공사 ○○본부 ○○지사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지적측량종목변경 및 측량비 반환처리 부당

[위법부당내용]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 관한 규정(’06.12.27개정)』 제9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지적공부의 정리를 목적으로 실시한 측량을 완료하였으나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측량의뢰인과 협의하여 업무를 종결 하거나 또는 지적현황 측량으로 종목을 변경하고 그 차액을 반환하되 측량접수시에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을 알 수 있었음에도 착오 접수한 때에는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공사○○본부 ○○지사에서는 지적공부정리를 목적으로 ’06.08.31자 민원인 김○○씨가 신청한 계양구 ○○○동 147-9외1필지 지적측량(토지분할)건과 관련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 측량 신청하고자 현황측량으로 종목변경 하고 측량수수료 1,333,200원 중 종목변경에 따른 136,400원 만을 환불하여 측량접수시에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 한 때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종목변경 처리하여 지적측량 민원인으로 하여금 지적측량의 불신을 초래한 사실이 있었음.

[처 분 요 구]

향후에는 지적측량 수수료 반환처리는 『지적측량수수료산정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측량 접수담당자는 지적측량을 의뢰한 민원인에 대하여 관계법규의 저촉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수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지적공부(분할) 정리 지연 처리

[위법부당내용]

지적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28조 제2호에 의하면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대위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토지이동(분할)에 따른 지적공부정리는 민원사무처리규정 및 지적법시행규칙 별지19호 서식에 의거 3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나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부설사업 편입토지와 관련 하여 ○○○○본부에서 ○○○-1404('05.09.26)호로 지적공부정리 신청한 관내 ○○동 100-3번지의 19필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정리('05.10.18자)가 13일 정도 지연 처리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향후에는 공공사업 등으로 관련부서에서 토지이동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규정 및 지적법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처리기일을 준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부득이 처리기한 내 처리가 지연될 경우에는 중간지연통지 등 행정조치를 취한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지적측량기준점표지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지적법 사무처리규정 제55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소관청은 도로.상하수도 등의 공사로 지적측량 기준점이 망실 또는 훼손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공사 시행자에게 공사 착수전에 지적측량기준점의 이전.재설치 또는 보수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한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적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소관청 또는 공사가 관리하는 지적측량기준점표지가 망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소관청 또는 공사가 각각 이를 재설치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나,

계양구 ○○○과에서는 '06.03~04월 까지 공사한 ○○2동 ○○A부근외 2개소 도로재포장공사에 대하여 '06.03.16자로 공사시행자인 ○○○과로부터 공사시행에 따른 협의가 있었음에도 훼손된 지적측량기준점(293번)에 대하여 지적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의하여 이전.재설치 또는 보수비용을 징수하여 재설치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보수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망실 및 훼손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재설치 하거나 보수하여 지적측량기준점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부동산중개업 관련업무 소홀

[위법부당내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제13조 제5항 규정에 의하면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재교부는 같은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면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르되,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사무소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05.07.29)이 개정 되었으나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 함.

[처 분 요 구]

공인중개사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징수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원 산림분야

[일련번호 : 8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공원 조성계획(변경) 입안 부서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수립하되,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고 녹지공간 배치등과 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 도시공원의 기능이 수행되도록 장기적인 변경 계획에 의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타 계획과의 관련성을 검토한 후 공원 조성계획 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 110-6번지 ○○○체육공원 (면적: 59,356㎡)에 대해 벨로드롬 경기장 조성사업 시행자인 인천광역시○○○본부에서 2005. 12. ○○○체육공원 조성계획변경을 위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심의를 득하고, 2006. 1. 9.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신청하여 2006. 1. 11(인고2006-11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하였으며,

2006. 4. ○○○체육공원 조성완료 후 관리사무실내 화장실 미 개방과 공원 이용객 증가로 인한 공원내 화장실 설치 요구 민원 증가로 계양구 문화공보실에서 공원내 화장실 설치를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07. 1. 공원조성변경계획 입안하여 변경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의 설치 관리, 공원조성계획 및 변경계획의 입안에 관한 사무는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 해당 관할 구청장이 처리하도록 사무위임 되어 있으며, 계양구 ○○○과 사무분장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의 설치 관리에 대한 사무를 분장 업무처리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 조성계획(변경) 입안에 대해 벨로드롬 경기장 건설사업은 인천광역시○○본부, 테니스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 설치는 계양구 ○○○과, 조경공사 시행 및 공원관리는 계양구 □□□과로 체육시설 설치와 공원조성 관리 부서 이원화로 인한 ○○체육공원 시설 설치에 따른 관리사무소 등 공원시설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변경) 변경 후 불과 5개월도 채 안되어 화장실 신축을 위한 공원 조성계획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계획(변경) 수립에 대하여는 공원 관리청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녹지공간 배치 등과 연계성을 감안하고 세부적인 공원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부서,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원조성계획 수립하여야 함에도 계양구 □□□과에서는 도시공원 조성 변경계획 입안에 대해 사업 시행 부서에서 인천광역시 ○○본부, 계양구 ○○○과로 입안하도록 이를 방관하여 잦은 공원조성계획 변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해서는 소관 공원관리부서에서 공원 조성계획을 종합 검토하고 타 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원 조성계획 입안하도록 하여야 하며, 타 부서에서 사업시행 할 경우 관계부서와 협조 또는 의견 수렴하여 공원조성 관리 총괄부서에서 종합계획을 검토하여 일괄적으로 공원조성계획(변경)을 수립 입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련번호 : 86]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도시공원 대장 작성 누락 등 공원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 법 제5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 도시공원에 대한 사실상의 공용 게시일부터 3개월 내에 도시공원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경 기재토록 되어 있으며,

도시공원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도시공원의 종류 및 명칭, 위치, 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도시공원관리방법, 연혁, 공원시설에 관한 사항, 시설을 및 건폐율 등이 기재되어야 함에도

계양구에서는 44개 공원 3,717천㎡ 도시공원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조성된 공원 31개소 272천㎡ 조성중인 공원 9개소 27천㎡ 미조성 공원 4개소 3,418천㎡를 관리하고 있으나,

○○ 근린공원 등 25개 공원에 대해 2002년 8월21일 도시공원대장을 지리정보시스템(GIS) 입력 관리하였으나, 도시공원 대장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면적, 시설을, 건폐율 등 기재 사항의 누락, 그리고 공원정비, 시설물 설치 등 변경 사항이 있었음에도 이를 변경 기록하지 않는 등 도시공원 대장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제5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대장의 작성기준에 의거 도시공원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할 것이며, 공원 시설 정비 등 추가 설치된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변경 사항 등을 기재하여 공원 시설 정비 및 점검 등 공원 조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7]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산불 예방 대책 추진 철저

[위법부당내용]

산불방지 대책 수립과 관련, 산림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규칙 101조의 규정에 의거 산불 취약 지역에 대해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 운영함에 있어 입산통제구역은 입산 통제일 30일 전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는 ○○동 산67-1번지 등 25개 지역 2,873천㎡에 대해 2006년 1월 25일 입산 통제구역을 춘기 2. 1~ 5. 15, 추기 11. 1~12. 15까지 지정 고시하여 일반인들이 허가 없이 입산을 통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은 산림법의 규정에 입산 통제일 30일 전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6년 춘기 입산통제구역을 2. 1~ 5. 15일까지 설정하였음에도 실제 고시일은 2006년 1월 25일에 통제구역을 고시하였으며, 입산통제구역 설정에 있어서도 현재 주택이 들어서 있는 효성동 산 83번지 등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편입된 지역도 일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6년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시 보유하고 있는 등짐펌프 등 산불 진화 장비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산불 발생시 신속히 대처가 가능해야 함에도 산불 진화장비 점검 하여 정비한 실적이 없으며, 신규 구입 장비에 대해서만 계획 수립한 사실이 있습니다.

산불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산불 관리카드를 보유하여 사후 산불발생지 복구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함에도 산불 발생대장 등을 비치하지 않고 있으며,

○○○-9166호(2006.10. 16.)로 산불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과 관련하여 지자체별 지역 여건이 반영된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하여 산불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에는 산불방지 대책 수립과 관련 입산 통제구역 지정 운영 등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지역 여건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하여 산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8]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공원·녹지 조성공사 하자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1조(하자검사)제1항 규정에 중
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 이상 정기적
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되
어있습니다.

같은법 시행규칙제71조 규정에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
는 때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있고.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검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공사에 대
한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공사명 및 계약금액, 계약 상대자, 준공연월일,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기타 참고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양구에서는 ○○체육공원 조성공사 등 36건의 공사에 대해 년 2
회 하자 보수를 실시하였으나, 담장허물고 나무심기 등 4건의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 미조치 등 공원녹지 조성공사 하자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 회계예규 제35 조의 규정에 의거 모든 공사는 년 2회 하자조사를 실시하여 하자 보수토록하고, 미 조치된 하자에 대해서는 수목 식재 적기(봄철 3~5월 초순)에 하자 보수 조치하시어 공원·녹지 조성공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9]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큰나무 등록 관리 업무 소홀

[위법부당내용]

보호수·보호수림으로 지정되지 않은 수목·수림중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목의 훼손을 예방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일정한 크기·군락을 이루고 있는 수목에 대해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 제16조 내지 제18조 큰 나무 등록관리 및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 하고 있으며,

대상은 공원, 가로녹지, 쉼터와 개인소유 50cm 이상 수목에 대해 수형 및 보존가치가 있는 수종에 대해 조사 등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에서 2004년 계양구 ○○동 6-18번지 백합나무 1본 등 6주 수목에 대해 큰나무 등록 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동 수목에 대해 등록 관리를 이행 하지 않았으며, 관리자도 선임하지 않는 등 등록 관리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큰나무로 조사된 수목 및 수림이 향후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및 보호수 로써의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여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0]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회수 31,975천 원

[신분상 조치] 훈계 1

[제 목] 설계변경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공 사 명 : ○○근린공원 조성공사(조경)

나. 도 급 자 : ○○건설(주) 대표 ○○○

다. 사업개요 : 공원조성 11,655.00㎡

라. 계약금액 : 1,482백만 원

마. 공사기간 : 2005.06.24~2006.03.22

2. 위법부당내용

공사감독업무 담당공무원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현장설명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 하여야 하며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행정자치부예규 제195호 2005.12)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위 공사의 경우 당초 조경식재 성토에 대하여 전체량을 일반도로 노체다짐 기준인 90% 다짐으로 과다하게 설계 공사 발주함은 물론 추후 공사시에도 시설물(도로 및 광장 시설 등)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비다짐 성토 조치 하였음에도 설계변경 조치없이 준공 하였으며,

당초 부지내 우수처리를 위해 매설된 흙관(D450)의 경우 계상된 145m 길

이중 원지반에서 시공이 가능한 40.5m에 대하여는 터파기 및 되메우기 물량 등을 정산 설계변경 하여야 함에도 누락하여 2건 합계 31,975천 원 상당을 과다하게 준공처리 지급 하는 등 공사 추진과 관련한 감독 관리를 소홀히 추진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과다하게 지급된 31,975천 원 상당에 대하여는 관련자와 협의하여 회수 조치하고
2.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에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